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격을 막아내자

5면

세계 여성의 날
해방을 향한
꿈과 투쟁

8~9면

진보의 진로
진보정치
재건의 과제

4면

변혁의 주체
노동계급은
힘이 사라졌다

7면

논쟁
보편적 증세가
옳은가

6면

발행인_ 김민식 편집인_ 김민식
인쇄인_ (주)아피디 이승철
등록번호_ 서울다08179 (격주간)
등록연월일_ 2009년 1월 12일
주소_ 서울시 중구 회현동2가 57-1 2층
전화_ 02-777-2792 팩스_ 02-6499-2791
제보_ 02-777-2791 E-Mail_ left21@left21.com

ISSN 2005-8217



Left21.com

제99호 | 2013년 3월 4일 ~ 3월 17일 | 값 1,800원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 반자본주의 | 노동자 연대

리프트21



부동산 투기, 병역 기피, 전관예우, 탈세, CIA...

정관영 쟁쟁한 통반장
자적도 없다



▶ 관련 기사 2, 3면

리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 (26개 호) 5만 원
2년 (52개 호) 10만 원

• 신청 : 02-777-2792, 웹사이트(www.left21.com)에서도 정기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일절 받지 않고, 독자·지지자 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신문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하기 문의 02-777-2792 / left21@left21.com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후원 및 정기구독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우리은행 1005-301-422382 / 신한은행 140-008-401399 / 농협 301-0010-1643-71 / 하나은행 296-910007-15804

누구의 말일까요?

“북한이 쳐들어오나. 왜 장갑차야? 정 말 미친 거 아냐?”

〈한국일보〉서화숙 기자.
취임식장 부근에 배치된 장갑차를 보고

“겸사겸사 농사 짓고 땅값이 오르면 좋은 거 아니냐.”
비서실장 허태열, 역시 투기의 달인다운 변명

“박근혜는 남들 하기 힘든 일을 해냈다. [취임 전에] 자신의 지지율을 선거 때 득표율보다 아래로 끌어내린 것이다.”
한홍구 교수

“종북 · 안보위해세력은 … 북한 수령 체제를 따르거나 마르크스 · 레닌, 트로츠키를 따르는 사람들을 부르는 총체적인 표현”
경찰청 (2013년 2월 20일) 발간위 총합팀장 유동열

“[자장면] 한 젓가락 입 안 가득 넣어 먹다 보니 ‘이게 사람 사는 맛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명박, 곧 콩밥 먹어야 할 텐데

“넌 우정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질 거야 … 흔들리지 마. 친구는 너의 공부를 대신해 주지 않아.”
대형 사교육 업체 ‘메가스터디’의 우정 파괴 광고

“저 가난한 전직 대통령은 이러다 최장수 기네스에 오르는 것 아닌가 몰라. 옛말이 맞아.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살아.”
개그맨 남희석, 29만 원밖에 없다는 그분?

“저는 지금도 동네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이발도 목욕탕에서 하고 있습니다.”
5년 만에 10억 원을 번 국무총리 정홍원의 “보통 사람” 되는 법

“이라크 전쟁이 벌어진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사람들은 나를 막 대하고 욕한다.”
영국 전 총리 토니 블레어

“팔굽혀펴기를 좀 했는데 오른쪽 앞통만 나온다. 난 이제 보수 우파가 돼 가는가.”
‘근육질이면 우파’라는 MBC 뉴스 보도를 조롱하는 네티즌

“청문회가 아니라 누가 더 더러운 걸레인지 [겨루는] 걸레 경연대회 같다. 이러다 ‘걸레 정부’라 칭할까 겁난다.”
명진스님

부동산 투기, 전관예우, 병역 기피, 탈세 …

“걸레 경연대회”에 나선 박근혜의 사람들

박근혜 정부 첫 내각 인사청문회를 보고 명진스님은 “누가 더 더러운 걸레인지 [겨루는] 걸레 경연대회 같다”고 힐난했다. 탈세, 부동산 투기를 밥 먹듯이 하면서, 권력을 이용해 부정 축재를 해 온 자들의 뻔뻔한 변명을 보는 마음을 대변한 것이다.

총리가 된 검찰 출신 정홍원은 한보그룹의 서울 수서지구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한 뒤에, 바로 그 한보아파트를 분양받아 시세차익을 챙겼다. 경제부총리 후보 현오석은 고위층 특혜 분양 비리가 터졌던 경기 분당 파트뷰아파트를 분양받

았다. 국방부 장관 후보 김병관은 군 재직 시절, 군사보호구역 해제 예정지를 미리 헐값에 매입했다가 팔았는데, 차익이 무려 80배로 알려졌다.

특히, ‘전관예우’ 관행이 사법, 경제, 국방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드러났다. 이는 고위 관료와 기업주 등 1퍼센트 세력이 권력과 특권을 매개로 얼마나 단단하게 얹혀 있는지 잘 보여 준다.

정홍원과 법무부 장관 후보 황교안은 검찰 출신답게 퇴직 후 대형 로펌에서 매달 수천에서 1억 원씩 보수를 받았다. 현오석도 전관예우 관행을 이용해 재정경

제부에서 1억 원 넘는 특혜를 받았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까지 했던 김병관은 국방부를 상대로 무기 수입 브로커로 활동했다.

이들의 지갑에서만이 아니라 생각에서도 썩은 내가 난다.

황교안은 “[국가보안법은] 개정이나 폐지가 논의될 수 없는 국가의 기간(으뜸)이나 본바탕이라는 뜻]법”이라고 했다. 그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노동 관련 입법이나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이 ‘법리상’ 모두 ‘불법’이라고도 했다.

정홍원은 “국기 경례 거부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없다”고 했다. 김병관은 제대 후 “종북세력 척결의 결사대가 되겠습니다” 하고 떠돌고 다녔다. 교육부장관 후보 서남수와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 유정복도 ‘5·16이 쿠데타냐’는 질문에 즉답을 회피했다.

심지어 박근혜는 신생 공룡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CIA 요원 의혹이 있는 김종훈을 내정했다.

이러니 새누리당 안에서조차 “고구마 줄기도 아니고 자고 나면 문제가 터진다”는 불만이 나올 정도다.

김문성



계속되는 새 정부의 불안정

1%만을 위해 준비하다가 다른 준비가 안 된 박근혜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서 ‘약속과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박근혜의 이미지는 벌써 급이 가기 시작했다.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국민대통합’ 약속은 진작부터 빛이 바랬다.

복지 공약에서는 말 바꾸기와 ‘먹튀’가 계속돼 왔고, ‘경제민주화’도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 목표와 과제에서 슬그머니 빠졌다. “경제부흥”과 “제2의 한강의 기적”만이 강조됐을 뿐이다.

국정목표는 물론이고 취임 연설문에서도 ‘노동’과 ‘민주주의’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민주노동은 “노동이라는 단어 자체를 불온시 한 군사독재 정권 시대로 돌아간 듯”하다고 꼬집었다.

북한 핵실험 이후 대북 강경책과 군비증강 주장도 노골적이기만 하다. 결국 대선 때 내걸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는 사라지고 ‘성장과 안보’라는 우파의 전통적 의제가 전면에 등장한 형국이다.

박근혜가 ‘국민대통합과 대량평’에는 관심도 없다는 것도 거듭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것은 박근혜가 취임식 전날 저녁에 윤창중을 청와대 대변인으로 전격 임명하면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대선에서 박근혜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을 “반대한민국 세력”이라고 한 자를 끝내 자신의 입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안에서도 나온 반대와 비판은 간단히 무시됐다.

15년간 박근혜를 보좌한 최측근 비서관 3인방 이재만·정호성·안봉근도 고스란히 청와대에 입성했다. 대표적 친박인 진영, 허태열도 각각 장관직과 비서실장직을 차지했다.

박근혜가 곁에 두려는 자들은 지금 대



박근혜는 결국 우파·지배계급과의 ‘약속만 지키려’ 한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장 앞 1인시위 중인 쌍용차 해고노동자.

부분 편법 증여,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병역 비리, 위장전입, 전관예우 등 온갖 의혹에 둘러싸여 있다.

이들은 또 ‘공직 → 로펌 · 기업 → 공직’을 반복해 왔다는 특징도 공유하고 있다. 공직에서 구축한 지위와 연줄을 이용해 로펌 · 기업에서 로비를 일삼고 거액의 급료를 받아 챙긴 것이다. 이런 자들이 누구를 대변할지는 볼 보듯 뻔하다.

예스맨

낡은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경제부총리 내정자 현오석의 아버지는 4·19 혁명 당시 시위대에 발포를 명령한 경찰수뇌부에 속해 있었

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서승환의 아버지 서종철은 1975년 인혁당 사형집행 명령서에 서명한 장본인이다. 민정수석 광상도는 1991년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수사 때 강기훈 씨를 수사하며 잠 안 재우기 고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의 중요한 공통점은 “예스맨”들이라는 것이다. “예스맨보다 더한 노드맨(고덕이는 사람)”이라는 비아냥도 있다. 박근혜는 입 안의 혀처럼 부릴 수 있는 이런 자들을 모아서 강력한 친위 체제를 구축하려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임기 초반 6개월 내에 공약의 70퍼센트를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주요 복지 공약이 ‘먹

튀’가 되는 상황에서, 여기서 말하는 ‘공약’이 무엇일지는 짐작할 만하다. 지금 박근혜가 지키고 싶은 것은 지배계급과 우파에게 자신이 했던 약속이다.

그러나 이런 시도가 박근혜 뜻대로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다. 여론을 반영해야 하는 민주통합당은 지금 박근혜의 일방적 정부조직개편안과 의혹 투성이 인사들을 문제 삼고 있다.

압력을 받기는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문제가 심각한 몇몇 인사들에 대한 ‘용퇴론’이 계속 나오고 있다. 권력과 자리를 둘러싼 친이-친박계의 내분과 암투가 격화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나홀로 취임’한 박근혜는 아직도 내각 구성과 장관 임명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국무회의조차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다. 물론 지금의 분열과 위기는 봉합될 듯하다. 새누리당은 결국 박근혜의 뒤를 따를 것이고, 동요하는 자유주의자들인 민주당도 “새 정부 출범에 협력하고 싶다”는 뜻을 비치고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의 ‘나홀로 불통 정치’가 안고 있는 위험성은 계속될 것이다. 한홍구 교수는 〈한겨레〉칼럼에서 “박정희의 종신형 권력운용 방식을 모델로 했다가는 5년 만기를 채우지도 못하고 부도가 나기 쉽다”고 경고한다. “박근혜가 따라 하는 박정희의 용인술은 결국 그의 리더십의 총체적 붕괴뿐 아니라 그 자신의 죽음까지 가져온 글자 그대로 치명적인 것이었다.”

“복지를 확대하되 증세는 없고 재정 건전성은 유지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을 풀기 어렵다.”(〈조선일보〉)는 박근혜의 딜레마도 여전하다.

특히 경제 위기 때문에 어려움은 더 크다. 영국 〈BBC〉는 “좋은 시절 비탈에서 경제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성장 엔진이 덜덜거리거나 멈추려 할 때는 훨씬 더 어렵다”며 박근혜의 어두운 앞날을 예측했다.

이 때문인지 총리 정홍원에 따르면 박근혜가 최근 “잠이 잘 안 온다. 어떻게 공약을 이행하고 나라를 이끌어 갈까 고민에 빠졌다”고 말했다고 한다.

진보진영은 이런 박근혜의 모습과 위기를 폭로하며 저항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근본적 사회변혁가들은 이 과정에서 중심적이고 주도적인 구실을 해야 한다.

김지윤

박근혜의 “법과 질서”

1%의 ‘안전’을 위해 99%를 두들길 쇠몽둥이

박근혜는 취임사에서 “힘이 아닌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법무부장관 내정자 황교안은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법은 언제나 지켜진다는 신뢰”를 강조한다. 그러나 황교안 본인 이야말로 그 신뢰를 앞장서 깬 당사자 아닌가. 온갖 불법 비리 의혹 투성이인 장관 후보자들은 또 어떤가.

그래서 첫째, 박근혜의 ‘법과 질서’는 무엇보다 매우 위선적일 것이다.

‘불법파견 자행, 대법원 판결 이행 거부’로 법질서 위반 2관왕인 현대차 정몽구는 박근혜 취임식에 초대돼 귀빈석에 앉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노동자들은 경찰에게 밀려났다.

최시중 등 권력형 비리 사범이 사면될 때, 권력형 비리를 폭로했던 노회찬은 의원직을 잃었다.

박근혜는 취임 직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해 “극단적 불법 투쟁,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개선해 …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노사관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것이 박근혜식 법치주의의 둘째 특징이 될 것이다. 물론 일부 막 나가는 기업주를 처벌하는 시늉은 할 수 있다. 최근 신세계 · 이마트 압수수색처럼 말이다. 그러나 ‘특권 세력’에는 솜방망이, 저항운동에는 쇠방망이라는 본질이 뒤바뀔 순 없다.

이런 방향은 박근혜의 인사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법무장관 내정자 황교안은 국가보안법, 집시법 해설서를 개정판까지 내면서 반동적 해석을 매뉴얼화해 온 자다.

그는 2009년 용산참사 강제 진압의

회원인이 “농성자들의 … 불법 · 폭력성 때문”이고, 국가보안법이 “개정이나 폐지가 논의될 수 없는 국가의 기간[오름]법”이라고 말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에는 “강기훈 사건” 수사 때 고문 의혹까지 있는 광상도가 임명됐다.

사실, 이런 억압적 “법치주의”는 신자유주의 우파 정권의 전형적 특징이다. “법과 질서”는 영국 전 총리 대처의 간판 기치였다. 미국의 레이건도 마찬가지였다.

신자유주의는 말로는 국가가 경제에서 물러나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에 ‘자유시장의 기강(질서)’을 바로 세우는 주체는 결국 자본주의 국가다.

그래서 대처는 “자유는 법이 만든다”고까지 했다. 그는 경찰력 강화, 형량 강화, 사법 행정 개악을 밀어붙였고, 노동자가 파업을 하기 매우 어렵게 법을 점차 뜯어고쳤다.

이를 정당화하려고 대처 정부는 범죄통계를 비틀어 흉악 범죄 공포를 조장했다. 소련의 안보 위협도 크게 이용했다.

신자유주의

당시 대처 정부는 급심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집권했다. 늘어나는 실업, 복지 삭감, 반민주 개악에 맞서는 저항운동을 제압하는 데 쓴 무기가 “법과 질서”였다.

지금 박근혜 정부도 경제 위기 조짐이 커지는 상황에서 들어섰다.

지배계급이 푹푹 묻혀 박근혜를 믿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강한 우파 정부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취임 초부터 불안정과 위기를 겪고 있다. 복지 공약 뒤집기와 비리 인사 내정 등으로 벌써 지지율이 대선 득표율 밑으로 떨어졌다.

의미심장하게도 경찰청 소속 치안정책연구소는 《치안전망2013》에서 역대 정부의 임기 첫 해 집회와 시위가 대폭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우려한다. 《치안전망2013》의 결론은 1998년 이후 절반 넘게 줄어든 보안경찰을 다시 늘리고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억압적 법치주의는 민주적 절차보다 법 집행의 효율성을 더 강조한다. 그래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기 힘들면 행정부 독자로 처리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 등의 수를 써서 각종 개악을 시도할 수 있다.

근대 철도 · 가스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이런 수법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사회 세력관계가 우파에게 유리해지면 각종 법 개악을 본격 추진할 것이다. 국가정보원이나 보안경찰을 동원한 진보진영 사찰도 늘어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일들을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이란 이름으로 정당화하려 할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 위협론을 부추겨 좌파를 ‘종북’으로 몰아칠 것이다. 각종 범죄 공포도 조장할 것이다. 지난해 이미 학교 폭력과 주폭 등을 그렇게 활용했다.

《치안전망2013》은 국가 기관과 시민사회가 전 사회적으로 “치안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범죄 공포를 부추기는 방식의 효과에 관해 영국 마르크스주의자 존 폴리뉴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우리가 이웃과 직장 동료들을 두려워할수록 지배자들에 맞서 단결하기는 더 힘들어진다. 우리가 더 원자화되고 고립될수록 우리의 저항력은 약해진다. … 흉악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일반적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지배자들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데 쉽게 이용될 수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법과 질서”가 내세우

는 의제와 범죄 공포의 허구성과 진정한 목적을 폭로해야 한다. 법치주의를 빙자한 저항운동 탄압에 진보진영이 단결해 맞서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진정한 ‘국민 안전’이 경찰력 강화 따위가 아니라 빈곤과 실업 등을 없애는 사회 개혁과 ‘99퍼센트의 저항 연대’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

김문성



분열을 넘어설 진보정치 재편, 어떻게 할 것인가

김인식

많은 노동자들이 진보정당의 재건·재편 필요성을 느낀다. 새로 등장한 강성 우파 박근혜 정부는 심증팔구 계속되는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계급에 떠넘기려는 공격을 할 것이고 이에 저항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동계를 대표하는 정당은 자본오열해 있고, 정치적으로 분화하고 다원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말미암아 진보진영과 좌파는 전보다 더 복잡하고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 실로 많은 노동자들이 정치적 안식처를 못 찾고, 정치적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난해 노동자 투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지난해 11월에 '노동정치연석회의'가 구성됐다. 여기에는 노동포럼, 노동자정당추진회의, 노동자연대다함께, 혁신네트워크, 전태일 노동대학, 노동자교육기관, 사회진보연대가 참여했다.

넉 달에 걸친 논의 끝에 노동포럼, 노동자정당추진회의, 노동자연대다함께, 혁신네트워크가 새로운 노동 중심의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상이한 정치 배경을 갖고 있는 경향들이 연합해 새로운 노동자 정당을 만들려는 시도는 의미가 있다.

부르주아적 기반과 성격 때문에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결과 충돌에서 흔히 자본가의 이익을 주되게 고려하는 민주당의 왼쪽에 노동계급에 기반한 정당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존 노동자 정당들의 분열·분화로 말미암아 조직 노동계급 내에서 정치적 공백이 생겨나고 있다. 노동계급의 여러 정치 경향들이 연합해 이 공백을 메우려는 것이 '노동정치연석회의'의 취지였다.

물론, 진보정치 세력의 정치적 분화 때문에 통합진보당·진보정의당·진보신당 등을 다 아울러 노동계를 대변하는 단일 정당을 만들기는 어렵다. 2008년 이전으로 돌아가기에는 정치 현실이 크게 바뀌었다.

그래서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도 '진보 다원주의'에 입각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 복수의 진보정당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특정 정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도리어 노동조합을 심각하게 분열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기성 부르주아 정당이 아닌 진보정당들을 지지하는 진보 다원주의적 정치 방침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것과 구별해서 선거에 대해서는 단일한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부르주아 제도 정치 무대에서 신자유주의와 긴축을 반대하는 좌파적 개혁주의 정당의 등장은 환영할 만한 발전이다 지난해 대선에 출마한 프랑스 좌파전선 멜랑송의 유세 현장.

것이다. 지난해 총선에서 창원·울산 등에서 진보정치 세력들이 분열하면서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얻은 것을 보면, 노동조합이 정치적으로 분화하더라도 선거에서 단결할 필요성은 분명하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정치적 분화가 있더라도, 노동조합 조직 자체는 정치 세력별로 갈라져서는 안 된다.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노동자들은 누구나 사용자에게 착취와 해고를 당하고 싶어 하지 않는

다. 따라서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이 노동조합은 최대한 광범하게 단결해야 한다.

새로운 노동 중심의 진보정당이라는 구상은 통합진보당 분당 이후 발생한 스탈린주의와 개혁주의의 분화에서 개혁주의의 정치 공간을 메우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부르주아 양당이 제도권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한국 정치 맥락에서 이런 프로젝트는 여전히 필요하다.(그렇더라

도 통합진보당이 노동자 정당이므로 특정 정점을 놓고 사안별 연대를 해야 한다.)

효과적인 단결을 위해 필요한 것들

이때 부르주아 포퓰리스트 세력이 포함돼 있는 진보정의당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이 당과의 관계 문제는 새롭게 건설할 노동자 진보정당의 목적에 비춰 판단해야 할 것이다.

즉, 박근혜 정부하에서 계속될 신자유

주의 공세에 맞서 노동계급의 투쟁과 과제를 대변하고자 하는 새 정당의 목표에 진보정의당은 동의하는지 여부를 시험대에 올려야 한다. 그런 점에서 노회찬 대표가 얼마 전에 박근혜에게 제안한 '전략적 동맹'은 (되지도 않을 일지만) 매우 위험하고 아주 부적절하다.

한편, 광범한 진보정당을 건설할 때 정치 원칙이나 강령이 상이한 세력들이 강령적 통일을 이루는 방식으로 연합을 시도하려 할 경우, 단결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포괄적인 정치 강령이나 대안 사회 비전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보다는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 단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보편적 무상복지, 부자 증세,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철폐,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 핵발전 폐기 등 진보진영 공동의 행동강령적 투쟁 과제를 중심으로 연합을 구성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내부 운영 구조도 느슨한 연대체 형태가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통합진보당 사태에서 보듯이, 특정 세력의 민주주의 훼손과 패권주의를 방지하려면 당 조직 구조와 운영 방식은 가능한 한 느슨하고 개방적이어야 한다.

진보진영의 각 세력과 정파들 사이에는 다양한 쟁점을 두고 정치적 이견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치와 조직 모두에서 매우 엄격한 동의 수준을 요구하는 당 모델보다는 각 정치 경향의 정치적·조직적 독자성을 보장하고, 이전에 대해서는 토론하면서도 단결을 추구할 수 있는 연대체적 방식이 필요하다.(그렇다고 새 정당을 공동전선으로 규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형식상으로는 당이라는 이름을 쓰더라도, 그 내부의 운영 구조는 느슨한 연대체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정치 원칙이 다른 세력들이 한 구조물 안에서 공존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당 건설 전망이 성공적으로 현실이 되려면, 박근혜 정부 하에서 노동자 운동이 공동전선을 잘 구축해 성공적인 저항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이고 제한된 쟁점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안별 공동 투쟁을 통해 노동자 단결과 연대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투쟁들을 통해 노동자들의 연대 의식이 고양되는 것이 새 정당 건설에 이바지할 것이다.

새로 나온 소책자

1퍼센트의 새로운 대표로 등장한 박근혜와 그 정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 정부가 소수 재벌과 특권층을 위해 99퍼센트 대중의 삶을 얼마나 더 짓밟을지 걱정된다.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에 맞서거나 싸울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 소책자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기가 되고, 용기와 투지를 북돋는 구실을 할 것이다.



《1퍼센트의 새로운 대변자
박근혜 정부의 성격과 모순,
저항의 과제》

최일봉 외 지음, 노동자연대다함께,
1백20쪽, 3천 5백 원

구입 문의 : 02-2271-2395,
altogether@altogether.or.kr

사회주의자들의 과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건설하고자 하는 새로운 노동 중심의 진보정당은 근본적으로는 좌파적 개혁주의 버전의 정당일 것이다.

정치 단위가 국민적 수준의 무대이고 운동 발전 수준이나 좌파의 상태가 나라마다 달라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사회주의자들은 지난해 국제적으로(특히 유럽에서) 부상한 좌파 개혁주의의 경험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주류 사회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왼쪽에 개혁주의 정당을 재건하려 한다는 점은 차이가 있지만

말이다.

프랑스의 좌파전선, 그리스의 시리자는 그 나라의 주류 사회민주주의(프랑스 사회당, 그리스 범그리스사회주의당)가 신자유주의를 수용하는 등 우경화면서 생겨난 공백을 메우고 있다. 좌파전선의 멜랑송이나 시리자의 알렉스 치프라스는 친숙한 개혁주의 언어로 대중의 불만을 표현해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 지지층을 흡수했다.

지배자들의 긴축을 반대하는 좌파적 개혁주의 정당이 제도 정치 무대에서 대안을 제공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발

전이다.

개혁주의자들은 반드시 배신할 거라며 추상적이고 종파적으로 비난하는 자세는 틀렸을 뿐 아니라, 변화하는 노동계급의 의식과 운동에 전혀 개입할 수가 없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은 좌파적 개혁주의 운동과 그것의 성공적 활동을 지지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좌파적 개혁주의일지라도 개혁주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오히려 성공할수록 '현실적이 되라'는 압력을 크게 받는다. 그리스 시리자의 당수 치프라스는 "시리자는 오늘날 우리 나라에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정치 운동일 뿐이다" 하고 말했다. 그래서 시리자는 그리스 노동자 운동에서 핵심 문제인 디폴트와 유로존 탈퇴를 반대한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은 좌파적 개혁주의 건설 움직임에 뛰어들어야 하지만, 동시에 근본적 사회변혁 조직 건설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

노동자 운동과 자본의 결정적 대결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근본적 사회변혁 운동가들이 독립적으로 조직될 필요가 있다.



실사 해고자들이 노동조합 전체를 위해 희생을 받아들일것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정으로 노동조합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없다. 투쟁력이 약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과제를 남긴 제65차 전교조 대의원대회

총력 투쟁을 잘하려면 강력한 규약시정명령 거부 운동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는 신자유주의 경쟁 교육에 반대해 온 전교조를 눈엣가시로 여긴다. 그래서 최근에 '해고자를 노동조합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겠다는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이에 전교조는 “조합원과 해고자를 분리해 노동조합 내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려는 간교한 술책”을 규탄하며 “총력투쟁으로 전교조 탄압을 분쇄”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것을 지지하면서 최근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벌어진 논쟁과 남은 과제에 관한 전교조 활동가의 글을 실는다.

김연오 전교조 전국 대의원

2월 23일 전교조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조중동 등 보수 언론은 일제히 해고자를 노조에서 배제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규약시정' 압박과 전교조 법외노조화 가능성을 보도했다. 때마침 검찰은 전교조 교사들의 모임인 '새시대 교육운동'을 이적단체로 기소했다.

이는 명백하게 대의원과 조합원 들을 위축시키려는 시도였다.

그래서 이번 대의원대회는 어느 때보다 참석률이 높았다. 대의원들의 관심은 온통 '규약시정명령'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쏠려 있었다.

그러나 지도부가 제출한 '총력투쟁안'은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할지 말지를 피하는 바람에 모호함이 있었다.

많은 언론들이 '전교조가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하고 총력 투쟁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지만, 이것은 정확치 않은 보도다.

진실을 말하자면, 지도부의 '총력투쟁안'은 규약시정명령 거부 입장과, 정부에 타협하지는 규약 변경 입장을 절충해 놓은 것이다.

게다가 우려스럽게도, '총력투쟁안'은 규약 변경의 여지를 열어 놓았다. '정부가 시정 명령을 내리는 시점에 다시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해 규약을 유지할지, 변경할지 결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수정안

이것은 모호하고 어정쩡하게 핵심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공격에 맞서 효과적으로 투쟁을 벌이기가 어려웠다. 이런 문제 의식에 공감한 대의원 18명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했다(대의원이 아닌 조합원 82명도 함께 서명했다).

수정안의 핵심은 “해고자를 배제하

는 노동부의 규약시정명령은 단지 해고자만의 문제로 협소하게 바라볼 수 없다. 이는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자, 무엇보다 전교조의 투쟁력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해고 조합원 배제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하고 총력투쟁을 하자”는 것이었다.

대의원대회 현장에서는 <벌떡교사들>*과 '경기교사현장모임'이 각각 규약시정명령을 분명하게 거부하는 입장이 담긴 신문과 리플릿을 판매·배포했다.

나는 대표 발의자로서 수정안을 설명했다. 나는 '정부의 규약 개정 압박을 거부해야 하는데, 지도부의 총력투쟁안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다. 이는 2010년 8월 대의원대회 결정에도 못 미친다' 하고 지적했다.

위원장은 2010년 대의원대회에서 규약시정명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당시 대의원대회는 해고 조합원의 자격을 부칙으로 남겨뒀다. 반면, 이번에 제출된 안은 규약 개정 여부를 다음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규약을 개정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여지를 남겨 둔 것이다.

그러나, 위원장은 지도부의 원안과 우리의 수정안이 '기조가 다르다'며 수정안을 별도 안건으로 분리시켰다. 나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도부는 수정안 발의자의 의견을 제한하는 비민주적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장은 규약 변경 여부를 둘러싸고 존재하는 전교조 내의 의견 대립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했던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지도부가 내놓은 총력 투쟁안의 모순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투쟁을 강조해 온 전교조 내 좌파 의견그룹인 '교찾사도' 규약시정명령 문제를 놓고 이를 수용하자는 쪽과 거부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갈렸다.

그러나 대다수 교찾사 성원들은 존재하는 이견을 일단 덮는 입장으로 수렴했다. 이를 통해 교찾사의 '단결'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것은 민감한 정치 문제를 회피한 것이다.

그러나 보니 안타깝게도, 이 중요한 문제에서 교찾사가 좌파답고 당당하게 정부의 방침을 거부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무기력해진 것이다.

국가 탄압에 맞서 운동의 대의를 지키는 정치적 원칙보다 노동조합 조직 보전을 앞세우는 노동조합주의의 약점이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빚어냈다.

그러나 신임 지도부가 계속 이런 모호한 태도를 취하면 지지자들이 실망하게 될 것이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한 대의원들은 원안의 모호함을 지적하며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하자고 주장했다. 수정안 발의에 서명한 조수진 대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원칙을 분명히 정하고 행동 통일해서 정부의 탄압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입장을 정하지 않고 분회·지회로 돌아가서 무엇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두 입장을 모두 말하며 조합원들에게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지도부도, 대의원대회도 무책임한 것입니다.”

치열한 토론이 종료되고 표결에 들어갔다. 재석 대의원 2백33명 중 1백87명이 원안을 찬성했다. 뒤이어 별도 안건으로 분리된 수정안을 다룰 차례였다.

수정안을 제출한 대의원들은 이미 규약 개정 찬반 토론이 충분히 됐으므로 “바로 표결에 부쳐 줄 것”을 요청했다. 여차하면 정족수 미달로 대의원대회가 유회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표결에 부담을 느낀 대의원들이 '심의보류동의안'을 내놔다. 이 안건을 반대할 수도, 그렇다고 찬성할 수도 없는 곤혹스러운 심정이었던 듯하다.

재석 대의원 2백31명 중 1백88명이 찬성해 수정안은 최종 심의 보류됐다.

거부 운동을 건설하자

이렇게 대의원대회는 마무리됐지만, 일부 대의원들은 원안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다. 총력 투쟁을 하자면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결정하자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대의원 80퍼센트가 '총력투쟁안'을 찬성했지만, 그 안에는 규약 변경에서부터 규약 유지까지 다양한 입장이 뒤섞여 있다.

그래서 '총력투쟁안'은 우리 내부의 이견과 분열이 말끔히 정리된 사화산(死火山)이 아니라 휴화산 같은 것이고, 이것은 머잖아 격론의 활화산이 될 공간이 크다.

지금도 현장조합원들 중에 만만치 않은 수가 거부 입장일 것이다. 지금은 그

렇지 않더라도,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거부 입장으로 돌아설 조합원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수정안 발의자들은 그 안건이 심의 보류됐다고 실망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지금부터 더 적극적으로 규약시정명령 거부 운동을 조직해야 한다.

신경전이 대단했던 대의원대회장에서 규약시정명령 거부 입장을 선동하는 <벌떡교사들>이 1백50부나 판매됐다. 한 대의원은 “수정안 덕분에 거부 입장의 근거들을 명확히 알 수 있었어요. 현장에서 그 주장을 전할게요” 하고 말했다.

수정안 발의자들은 정부의 규약시정명령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운동의 초석을 놓았다.

앞으로 정부와 우파는 압박 수위를 더 한층 높이며 공격을 시도할 것이다. 대의원대회 이후 우파 언론들은 '전교조가 법을 어기고 있다'고 비난하고, 우익은 '노조설립을 취소하지 않는 고용노동부를 교발하겠다'며 나서고 있다.

우리가 동요하고 후퇴하는 조짐을 보일 때가 저들에게는 공격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탄압에 항의하는 총력 투쟁을 잘하려면 그 총력 투쟁 속에서 규약 개약을 거부하는 광범한 운동을 펼쳐 나가야 한다. 조만간 있을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하고 총력 투쟁하자는 명확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

<벌떡교사들>

저항하는 교사들의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현장 교사들이 직접 제작하는 4번째 월간 신문으로, 지난 1월에 창간했다.

구독 문의 02-737-0628, ruleachers@hanmail.net



진보의 진로 논쟁

복지 확대를 위해 보편적 증세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취임식을 앞두고 발표한 박근혜의 복지 정책은 공약에 비해 대폭 후퇴했다.

기초노령연금은 하위 70퍼센트에게만 2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4만~20만 원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선별적으로 주려다 보니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층의 연금을 깎는 일도 벌어질 듯하다.

“성실한 국민의 입장에서서는 역차별이라고 항의할 만하다. 정당한 항의다. 국민연금을 2백만~3백만 원 받으면 이 애기를 수용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1인당 평균액은 월 28만 원밖에 안 된다.”(김연명 중앙대 교수)

4대 중증질환 보장도 핵심인 3대 비급여(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간병비)는 제외했다. 노인 입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도 75세부터 그것도 단계적으로 하기로 했다.

1년 동안 내야 할 총진료비가 일정액을 넘으면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하는 ‘본인부담 상한제’는 저소득층의 경우 오히려 부담이 늘었다.

비록 선거용 공약이었다고는 해도 박근혜가 이토록 빨리 공약을 뒤집은 까닭은 재벌·부자 등 핵심 지지 기반의 압력 때문이다. 이들은 복지 확대가 자신들의 이윤을 갉아먹을까봐 노심조사한다.

당장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대대적인 부자 감세 조치 때문에 복지에 쓸 정부 재정 자체가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주·부자·관료들은 흑시라도 복지 확대 과정에서 자신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까 봐 걱정하고 있다. 선거 때문에 잠시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지만 대선이 끝나자마자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지난해 세금이 애초 목표보다 2조 8천억 원이나 덜 걷힐 정도로 경기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다. 결국 박근혜는 이들 재벌·부자들의 이익을 조금도 건드리지 않는 길을 선택했다.

박근혜가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에 각각 임명한 현오석·조원동은 복지 확대 자체에 반대해 온 인물들이다. 현오석은 지난 연말 인터뷰에서 차기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과제로 ‘복지 확대’를 뽑을 정도였다.

그러다보니 진보진영 일부에서는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보편적’ 증세를 요구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다같이 세금을 올려서 그 돈으로 복지를 확대하면 노동자들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이다.

이전의 부자 증세 요구에 비춰보면 명백히 후퇴한 것이지만 이런 주장이 진보진영 안에서 새로운 것은 아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나 그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등에 참여하는 일부 진보적 지식인들이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보편적 증세를 대안으로 제기해 왔다.

박근혜의 복지 공약에 일말의 기대를 건 사람들은 최근의 공약 후퇴를 보며 이런 주장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에서는 우파가 보편적 증세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는 상황에서 더 이런 대안이 솔깃하게 들릴 것이다.

“복지를 늘리기 위해 전면적 세제 개편을 통해 보편적 증세를 할 것이냐, 아

니면 현행 세율을 유지하면서 조달 가능한 재원 범위 내에서 복지공약을 재조정하느냐. 우리는 복지 로드맵의 재조정이 옳다고 본다.”(《중앙일보》)

그러니, 복지를 포기하는 것보다 보편적 증세를 수용하는 게 나은 일이라고 여길게 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인상이나 사회복지제 신설 등 증세를 통한 복지재정 확보에 대해서도 열린 시각을 가져야 한다.”(이창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소장)

후퇴

하지만 보편적 증세가 결국 노동자들에게 이득이 된다는 주장은 정확한 얘기가 아니다.

그런 조치가 이뤄지면 자본가들도 세금을 조금 더 내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 돈으로 저소득층에 복지를 제공하면 그들의 삶을 조금 개선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복지라도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첫째, 이는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는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다.

정부와 주류 언론의 악선동과 달리 상대적 고소득 노동자들조차 이 사회의 특권층이라고 부를 만한 처지가 못 된다.

현대차·삼성전자 노동자들의 고임금은 수명을 갉아먹는 밤샘 노동과 백혈병 같은 산재를 대가로 한 것이었다. 한국 노동자들의 시간당 실질임금은 OECD 최저 수준이다.

비정규직의 처참한 삶과 정규직의 고된 노동에서 이익을 거둔 것은 기업주들이었다.

“지난 10년 사이에 가계저축은 0.56퍼센트 늘고 기업저축은 57.39퍼센트 급증[해] 2011년 기업저축은 2백46조 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이다. 2012년 3월 기준 상위 45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총액은 3백13조 원에 달한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는 것도 아니다. 한국의 직접세 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낮다고 하지만 이는 기업주·부자 들의 세금 부담이 턱없이 적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보면 보편적 증세론은 진정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흐리는 이데올로기 구실을 한다. 보편적 증세론을 제기해 온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최근 “우리 세대가 져야 할 몫을 온전히 책임지는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처럼 복지 제도를 계급 간 재분배가 아니라 세대 간 재분배 문제로 왜곡하는 것이야말로 자본가들이 바라는 바다. 이런 논리는 기업주·부자 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노동자들 사이에 갈등을 낳는다. 이는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낸다.

둘째, 보편적 증세가 부자들의 세금도 늘릴 것이라는 생각은 지나치게 순진한 것이다.

금융·부동산·증여·상속 등 기업주·부자 들의 주 수입원은 아예 징세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득세 인상도 결국 노동자들의 부담만 늘리는 효과를 낸다.

게다가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노동자들에 비해 기업주·부자 들의 합법적·불법적 탈세는 근본적으로 막기 어

렵다. 이견회가 고작 16억 원에 삼성그룹 전체를 아들에게 물려준 것이 이를 잘 보여 준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총리·장관 후보자들도 탈세의 산 증인들이다.

2011년에 탈세 규모 상위 1백대 기업이 누락한 소득액은 4조 원에 달했고 탈세 규모는 2조 6천8백억 원이었다.

셋째, 보편적 증세론은 현실에서 복지와 그 재원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계급투쟁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계급으로 나뉜 사회에서 중립적인 해결책은 없다.

노동자들은 계급 간 재분배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부자 증세와 복지 확대를 요구해 왔다. 반대로 자본가들은 설사 복지를 늘리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그 부담을 피하려고 노력해 왔다.

오늘날 기업주·부자 들은 그동안 부담해 오던 비용(세금)마저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 한다.

박근혜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서 “세입 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 방법의 하나로 고려되고 있는 게 부가가치세 인상이다. OECD 같은 자본가들의 국제기구도 부가가치세 인상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일정한 비율로 부과하는(대략 10퍼센트) 부가가치세는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비율로 세금을 걷는 역진세다. 그러므로 간접세 인상은 노동자들을 쥐어짜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 주는 파렴치한 것이다.

불공평

민간보험을 활성화하는 등 수익자 부담 논리를 강화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간보험이 국가 복지를 대체하는 폭이 커질수록 노동자들의 부담은 늘어나고 자본가들의 세금 부담은 줄어든다.

따라서 진정으로 복지를 늘리려면 불공평한 조세제도 자체에 갈을 대야 하고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려는 지배자들에 맞서 싸워야 한다.

4대보험 등 사회보장제에서 기업주들이 부담하는 비율을 OECD 수준으로만 높여도 매년 30조 원이 넘는 재원이 마련된다. 상위 1퍼센트의 소득세율을 42퍼센트로만 올려도 매년 약 4조 원을 걷을 수 있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초대형 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20퍼센트로만 올려도(법정 최고 세율은 22퍼센트) 2조 3천 억 원을 더 걷을 수 있다.

유럽 복지국가들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상대적으로 직접세 비중이 높았던 스웨덴, 영국 같은 나라들에서조차 노동자들이 낸 세금과 복지 혜택이 거의 같은 양이었다. 미국에서는 아예 노동자들이 낸 세금으로 자본가들을 먹여 살렸다. 미국보다도 불평등한 조세 제도를 가진 한국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안 봐도 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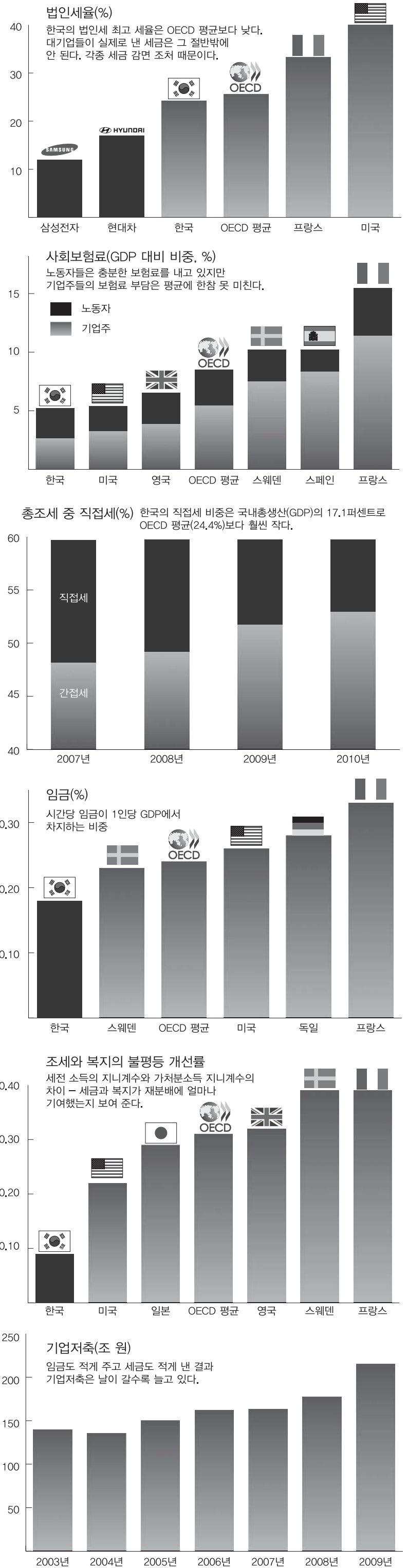
요컨대 보편적 증세는 얼핏 보기에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세불평등을 확대하고 현실의 계급투쟁에서 노동자들의 힘을 약하게 만든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부자 증세 요구에서 후퇴해선 안 된다.

장호중

그래프로 보는 한국의 조세불평등

자료출처: OECD, 한국은행, 통계청, 〈매일경제〉



사회 변혁의 주체 논쟁

노동계급의 잠재력은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는가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우파 정부의 고통 전가에 맞선 노동자들의 저항은 계속됐지만, 많은 저항들이 성공과 승리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지금도 곳곳에서 노동자들의 저항과 절규는 계속되지만 투쟁 장기화와 고립, 분열 등도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사회 변화의 주체로서 노동계급의 중요성에 대한 의문과 반론 등이 흔히 제기돼 왔다. 최근에도 진보정당들에서 ‘노동 중심성’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왜 사회 변혁에서 노동계급의 구실이 중요한지, 노동계급의 잠재력은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는지를 다루는 글을 싣는다.

사회 전체로 봤을 때 노동자들이 가장 가난한 것은 아니다. 또 가장 고통받는 계급인 것도 아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특별하다. 그들이 생산하는 부가 사회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이다.

노동계급을 규정하는 것은 그들이 생산과 맺는 관계다. 노동자들은 먹고살기 위해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을 팔아야만 하는 처지다. 생산직, 사무직,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를 막론하고 이것은 진실이다.

자본주의에서 사장들은 최대 이윤을 뽑아내고, 경쟁자들보다 싸게 팔기 위해 분투한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사업 감각” 덕에 부자가 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노동자들을 착취해 이윤을 얻는다. 사장들은 생산물의 가치보다 더 적은 돈을 노동자들에게 준다.

이것이 노동자들에게 힘을 부여한다. 노동자들이 없으면 이윤이 말라붙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작업장, 산업 부문, 혹은 국가 전체도 멈출 수 있다.

자본주의 체제는 지속적으로 이런 종류의 계급투쟁을 부추긴다.

착취

경쟁의 압력 때문에 사장들은 착취 수준을 올리고 노동자들을 더 많이 쥐어짜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더 성공적으로 착취 수준을 올리고 노동자들을 쥐어짜 경쟁자들에 밀려 업계에서 내몰릴 수 있다.

동시에 노동자들이 그들의 조건을 방어·개선하기 위해 투쟁하게 함으로써 반복적 대립을 낳는다.

자본주의는 노동자들을 공장과 사무실에 한데 모은다. 그곳에서 그들은 똑같은 조건에 처하고 똑같은 고충에 시달린다.

사장들에게 무엇이든 따내려면, 노동자들은 뭉쳐서 싸워야만 한다.

이런 집단적 투쟁으로 노동자들은 그들을 분열시킬 수도 있는 사상을 물리칠 수 있다. 노동자들은 투쟁 속에서 자신들이 집단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지배자들은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인 사상으로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약화시키려 한다. 지배자들은 그런 차별적 사상들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고, 일부 노동자들은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기도 한다.

예컨대, 몇몇 건설 노동자들은 일자리 손실이 사장이 아니라 이주노동자들 탓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연대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

2009년에 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는 건설사가 이주노동자 조합원들만 골라서 해고하는 것에 맞서 싸웠다. 한국인과 이주노동자가 함께 싸운 결과 해고된 이주노동자가 모두 복직할 수 있었다. 노동자들이 이간질을 넘어서 단결했던 것이다.

이 말이 곧 노동자들만 변화를 이룰 수



오늘날에도 사회를 변혁하려면 노동자의 집단적 구실이 핵심적이다 2월 23일 전국노동자대회.

있다는 뜻은 아니다. 1960년대 미국의 흑인 공민권 운동이나 20세기 초 영국에서 있었던 여성 참정권 운동을 보라.

이런 것들은 진정한 변화를 이뤄냈고, 오늘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길이길이 감동을 준다. 그리고 사회운동과 노동계급 사이에 무슨 만리장성이 있는 게 아니다. 노동자들도 이런 운동의 일부다.

보통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 세상을 굴릴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도록 교육받았다.

그러나 노동자들한테 사회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 지식, 경험이 있다.

자동차공장을 생각해 보라. 현대차 노동자들이 일손을 멈추면 회장 정몽구는 자동차 문짝 하나도 칠하지 못할 것이다. 이견희 역시 핸드폰 액정 하나 조립하지 못할 것이다. 반면 경영자들이 사라져도 공장은 계속 굴러갈 것이다.

공장뿐 아니라 철도, 공공기관, 학교, 은행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다.

노동자들이 더 나은 세상을 쟁취할 수 있다면, 왜 그들은 많은 경우 세상을 바꾸는 데 관심이 없어 보이는가?

분명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세상을 원한다. 그러나 그들은 작은 것 하나도 바꾸기에는 자신이 너무 무력하다고 느낀다.

혁명이 칼 마르크스는 노동을 해서 주변 환경을 자의식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야말로 인간을 동물과 다르게 만드는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그런 일을 할 능력이 없다고 느낀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소수 지배자들이 우리의 능력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지배자들은 우리가 “분수”를 알아야 한다고 끊임없이 말함으로써 이런 무력감을 부추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투쟁이 일어나면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다.

이집트에서는 2011년에 혁명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증오를 한 몸에 받아 온 독재자 무바라크가 날아갔다. 이전 30년 동안 사람들은 무바라크의 잔혹함에 고통받아 왔고, 평범한 사람들은 감히 그의 정권에 맞설 수 없을 듯 보였다.

그러나 반란이 시작되고 대중적 거리 시위가 일어나자,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이 여기에 동참할 자신감을 얻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파업이 무바라크를 최종적으로 쫓아내는 데 결정적 구실을 했다.

파업

노동자들은 집단적으로 행동에 나설 때 계급으로서 자신들이 가진 힘을 자각할 수 있다. 세상을 움직이는 데 사장이나 관리자가 필요하지 않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몇몇 파업이 건축에 반대할 뿐 아니라 사장의 통제력에 도전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도 했다.

파업 언론인들은 방송곡을 접수해 노동자들의 투쟁을 알리는 뉴스를 내보냈다.

파업에 참가한 기자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가 바뀌어서 노동계급이 세계를 바꿀 힘이 이제는 사라졌다고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노동계급이 “전통적” 노동계급과 새로운 형태의 불안정한 계급으로 나뉘었다고 주장한다.

이 새로운 계급은 저임금, 단기고용인 비정규직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새로운 계급’은 “전통적” 노동계급보다 힘도 약하고 그들과 이해관계

“저들이 건물의 전기를 끊어 버렸어요, 하지만 전력 노동자들이 오더니 다시 전기를 연결해 줬어요.”

그러나 노동자들이 거대하게 투쟁에 나선다고 해서 승리가 보장된 것은 아니다.

노동자 일부는 사회의 지배적 사상을 받아들인다. 다른 일부는 자본주의를 끝내고자 하는 혁명가가 된다. 대부분은 둘 다 아니다. 혁명적 시기에도 이는 예외가 아니다.

1917년 러시아혁명 당시, 혁명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둘러싸고 거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멘셰비키라고 불린 사회주의자들은 혁명이 의회 민주주의에서 멈추기를 바랐다. 그들과 달리 볼셰비키는 노동자들이 권력을 장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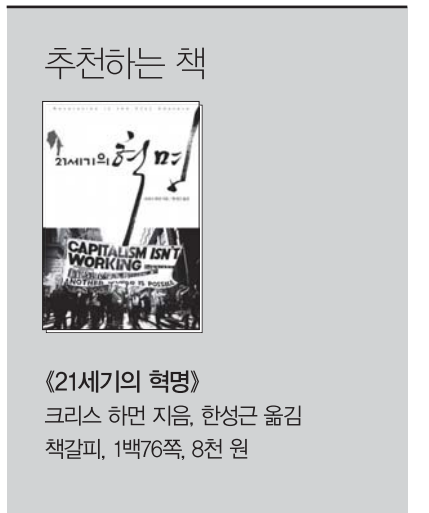
1917년 여름을 거치면서, 노동자들의 생각이 급진화했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볼셰비키를 지지하게 됐다.

10월혁명에서 볼셰비키는 노동자들이 최종적으로 권력을 장악하는 데 결정적 구실을 했다. 볼셰비키와 같은 혁명적 정당이 혁명을 만들어 낸 것은 아니다. 그러나 투쟁이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

또 중요한 점은, 투쟁의 승리가 노동자

들이 지배자들을 넘어서도록 하는 씨앗이 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혁명은 지배계급을 다른 방식으로 타도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하기도 하지만, 혁명을 성사시키는 과정 속에서만 지배계급을 타도하는 바로 그 계급 [노동계급]이 이전 시대의 모욕을 제거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걸맞도록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기도 하다.”



시대 변화가 노동자들의 힘을 사라지게 했는가?

도 다르다는 것이다.

노동계급 내에서 계속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 노동자들이 이전보다 더 불안정한 일자리를 갖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고임금 직장을 가진 황금기 같은 것은 한번도 없었다.

그리고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 많은 곳이라고 노동자들이 항상 더 약한 것도 아니다.

2010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공장을 25일간 점거해 차량 생산을 중단시켰다. 이 때문에 사측은 무려 3천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노동자들의 힘은 특정 직종이나 그들이 받는 월급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들의 힘은 그들이 부를 생산하며 노동을 거부함으로써 이윤 생산을 멈출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서 나온다.

박근혜가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당선됐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소수의 부자 여성들 말고 여성 대중의 ‘행복한 미래를 열어 줄 리는 없다. 이 정부의 여성 의식 수준은 최측근인 청와대 비서실장 허태열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는 “섹스 프리(한)… 금기 없는 국제 관광특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여성의 성을 판매 대상으로 본다. 박근혜의 정부에서 여성 장관은 겨우 두 명이라 ‘유리천장’ 현상은 여전하다. 무엇보다 신고한 재산만 51억 원이 넘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쥐꼬리 임금에 받는 여성 노동자의 삶을 대변할 수 없다. 사실 일부 여성이 사회 상층에 올라가는 것이 여성 전반의 지위를 높여 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여성들 내의 계급 격차가 훨씬 더 핵심적인 특징이 되고 있다. 여성 주식 부자 1등인 삼성 이진희 회장도 천 허창희와 2위인 신세계 회장이 명회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데 거리가 멀다. 이들에게 여성 노동자가족부 장관은 쥐꼬리 임금에 받는 여성 노동자의 삶에 대변할 수 없다. 박근혜는 ‘2015년까지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연초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쫓겨나 해고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1만여 명도 해고됐다. 이들의 압도 다수가 여성이다.

체계적 차별

여성의 80퍼센트가 대학에 진학할 정도로 교육 수준이 높아졌고,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활발한데도 체계적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다.

한국의 성 격차지수는 108위(전 세계 1백35개 나라 중)로 OECD 최하위다. 남녀 임금 격차도 10년째 OECD 국가 중 9위다.

여성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2000년대 들어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여성 노동자 중 59.4퍼센트가 비정규직이다. 남성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성 정규직 임금은 67.2, 남성 비정규직 임금은 52.8, 여성 비정규직 임금은 40.3밖에 안 된다(2012년 8월). 여성 노동자들은 고용 형태와 성에 따른 차별을 이중으로 받는 것이다.

‘3·8 세계 여성의 날’의 유래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 여성 노동자들의 시위에 유래했다. 여성 노동자 수백 명이 여성의 투표권과 노동 결성권을 요구하며 맨해튼의 동쪽 심장부에 있는 루트2가 광장에 모여 들었다.

그들은 주로 뉴욕에 있는 의류 산업의 초창기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은 ‘2만 인의 반란’으로 알려진 1909년 13주 동안의 파업에서 절정에 올랐다. 파업 노동자들은 국제적 명성을 획득했고, 투쟁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여성의 평등을 위한 투쟁의 상징이 됐다. 독일의 사회주의 혁명가 클라라 제트킨은 1910년 제2인터내셔널 국제노동여성회의에서 해마다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할 것을 제안했고 1911년부터 경축하기 시작했다.

투쟁하는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

“싸워서 부당함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우의정 충남학생수련원 수련지도원,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충남지부장 지부장



충남학생수련원에서 제가 하는 업무는 아이들에게 수련 활동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수련 기간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밖에서 일해야 하고, 24시간 일을 하니까 수련원 내 숙소에서 생활합니다. 저는 세아이를 키우는 처지라 특히 힘들어요. 육아휴직이라고 말것 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비정규직은 그럴 수가 없어요. 육아휴직 기간에 계약을 해지해 버려서 쓸 엄두도 못내요. 이처럼 차별이 심해 노동조합을 만들게 됐습니다. 전국에서 “한편 해보자”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충남도 예외는 아니

30대 후반부터 여성 정규직 비율이 감소하고, 반면 비정규직 비율이 늘어나는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출산과 육아 이후 여성들이 돌아갈 정규직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이것은 박근혜의 이른바 ‘무상보육’ 정책이 여성 노동자들이 육아 때문에 받는 고통과 차별을 크게 덜어 줄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준다. 보육료 지원 확대가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었지만, 박근혜의 정책은 단지 보육료 지원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보육의 질 개선과, 육아로 인한 여성 고용 차별을 없애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된다. 민간 보육시설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상, 보육료 지원만은 시정화한 부족할 수 있다. 겨우 5.3퍼센트에 못지 않는 공공급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임신으로 인한 해고나 차별을 없애야 한다.

자본주의와 여성 차별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졌음에도 여성 차별이 지속되는 이유는 자본주의 체제가 여성 차별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성 차별은 자본주의 이전의 계급 사회에서도 존재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여성 차별은 자본주의가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체제를 유지하는 고유한 방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여성들이 대거 사회에 진출한 21세기에도 여전히 여성들이 집안에서 해야 할 구실이 강조된다. 건강하고 교육받은 노동력이 끊임없이 공급되면 누군가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먹고 입고 쓸 수 있도록 뒷바라지해야 하고, 다음 세대 노동력을 길러야 한다. 자본가는 자신들이 마땅히 져야 할 이 부담을 개별 가정의 여성에게 떠넘긴다.

물론 자본가는 여성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보육에 투자하지만, 여성을 육아와 가사노동에서 해방시킬 정도로 투자하지는 않는다. 자본가들은 ‘여성 이 본래 있어야 할 곳은 가정’이라는 관념을 부추겨 여성을 부차적 노동력으로 취급하고 여성들에게 싼 임금과 저질 일자리를 강요한다. 여성이 집안에서 하는 구실은 각종 여성 천대의 원인이기도 하다. 여성 가입 임금은 40.3밖에 안 된다(2012년 8월). 여성 노동자들은 고용 형태와 성에 따른 차별을 이중으로 받는 것이다.

혁명정당인 불세비키가 이끈 혁명 정부는 여성 해방 조치들을 우선적으로 실시했다. 혁명 첫 해에 여성 선거권 완전 보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전면적인 유급 출산 휴가제 도입을 공포했다. 낙태 합법화로 무료 시술이 제공됐다. 부부 중 한 쪽만 원해도 이혼이 가능해졌고 동성애와 간통도 처벌받지 않게 됐다. 이 정책들은 현재의 기준으로 봐도 급

‘여성 대통령’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여성 해방의 꿈



자녀해 11월 3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

투쟁이 깊어졌다. 더 나아가, 불세비키는 여성 노동자의 단결을 가로막는 구실을 한다. 남성 노동자 역시 자본주의 체제에서 철저히 권력에서 소외되고 있는 계 진정된 현을 부추겨 여성을 부차적 노동력으로 취급하고 여성들에게 싼 임금과 저질 일자리를 강요한다. 여성이 집안에서 하는 구실은 각종 여성 천대의 원인이기도 하다. 여성 가입 임금은 40.3밖에 안 된다(2012년 8월). 여성 노동자들은 고용 형태와 성에 따른 차별을 이중으로 받는 것이다.

노동계급과 여성 해방

오늘날 여성들은 비록 차별받지만, 동시에 자본주의 체제 작동에서 핵심적인 산업과 서비스 부문에서 일한다. 집안일과 유사한 일 — 청소, 간병, 보육 등 — 을 할 때조차 집안에서 무보수 가사노동으로 할 때와 사회적 임금노동의 일부로서 할 때 그 성격이 달라진다. 여성 노동자들은 가정 주부로서는 발휘하지 못하는 힘을 노동자로서는 발휘할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대학 청소 노동자들이 집단적 파업으로 임금 인상을 정취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즉, 여성 노동자들은 여전히 온갖 천대

최미진

이집트 혁명이 보여 준 여성 해방의 길

“타흐리르는 파라다이스 같았다”

주류 언론은 아랍 세계의 평범한 여성들을 성차별적 질서에 순종하고 자기 권리에 눈뜨지 못한 사람들처럼 보도해 왔다. 서구 문화를 접한 소수 엘리트가 이들을 계몽해야 한다고 했다. 패선 잡지 《보그》가 시리아 혁명이 발발하기 직전에, 영국에서 공부한 학살자 아사드의 아내를 “그림자 가득한 나라의 한 줄기 빛”이라고 치켜세운 것은 극단적 사례다.

그러나 2010년부터 시작된 아랍 혁명은 이런 위선을 걷어내고 진정한 여성 해방이 어떻게 가능한지 보여 줬다. 이집트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한 많은 여성들이 혁명 속에서 용기를 얻고 거리에 나왔다. 다음은 50대 여성 이브라힘의 증언이다.

“2005년 [무바라크에 반대하는] 시위를 보면서 정말 동참하고 싶었지만 경찰의 봉쇄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 그러나 시위대가 ‘무바라크 퇴진하라’고 외치는 것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뻐했다. 언젠가는 나도 그 말을 외쳐 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2011년 혁명이 시작됐을 때, 내 옆에 마침내 이휘질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저항 세력의 신문을 읽고 1월 25일 시위 계획을 알았다. 그리고 1월 25일, 생애 처음으로 타흐리르 광장에 나갔다. “당시 보안 경찰과 군부는 유독 여성들을 가혹하게 대했다. 여성은 경찰 앞에서 서 있기만 해도 모욕 당하고 두들겨 맞았다. 나도 그중 한 명이었다.”



이집트 혁명에서 중요한 구실을 한 여성들.

리는 검은색의 무슬림 복장을 쓰고 있지만 내가 선택한 것이다. 우리를 억압하는 것은 정권과 군부지, 나감아이다. “나는 무슬림이면서 사회주의자다. 그리고 무슬림이면서 자유주의자인 사람, 무슬림이면서 공산주의자인 사람도 있다. 종교와 정치는 별개기 때문이다.”

혁명 전, 사람이 많이 불리는 타흐리르 광장은 성폭력의 상징이었다. 정부와 경찰은 성폭력 피해 여성의 ‘행실’을 탓곤 했다. 그러나 무바라크를 몰아낸 18일 동안 타흐리르 광장에서는 처음으로 성폭력이 자취를 감췄고, 타흐리르 광장은 오늘날 해방의 상징이 됐다.

물론 모든 이집트인들의 의식이 2년 안에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다. 그러나 현실은 더는 예전 같지 않다. 이제는 큰 시위나 종교 행사가 있는 날에 사람들 사이를 누비며 성폭력범을 색출하고, 물리적 충돌까지 불시하며 성폭력에 맞서 싸우는 단체들을 볼 수 있다. 그들은 거리의 성폭력에서 여성을 보호하는 것은, 단지 여성뿐 아니라 시위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이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한다고 본다.

혁명을 경험하며 많은 이집트인들이 여성차별과 권정을 바꿨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혁명을 ‘도둑질’하려는 정부에 맞서 이집트에서는 오늘날 남성과 여성이 함께 싸우고 있다.

김중환

경제 위기 때면 높아지는 가족 가치 수호의 목소리

“가족 부활은 국가 과제다. 올 한 해도 가족과 함께 가면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다.” 2013년 새해 첫날, 《조선일보》는 “가족의 해체”를 한탄했다. 《조선일보》는 “가족의 붕괴와 해체는 … 각종 범죄의 배경”이고, “가족 해체에 따른 연간 사회적 비용”이 11조 원이나 된다고 한다. “가족 부활”을 “국가 과제”로 삼았다.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 시기에 가족제도가 하는 경제적·이데올로기적 구실은 지배자들에게 아주 절실하다. 경제 위기 시기에 지배자들은 복지 예산이 너무 늘어나지 않도록 하거나, 심지어 삭감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복지가 형편없어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개별 가정 여성의 몫이 된다.

경제 위기 시기에 자본주의 국가들이 가족 가치를 강조하고 여성의 헌신과 봉사 등을 강조하는 보수주의를 강화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물론 지배자들이 ‘가족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에서 가족제도가 하는 구실과 연결돼 있다. 자본가 계급은 가족제도(특히 여성의 가사노동)를 통해 그들이 착취하는 노동자들과 차세대 노동자들을 거의 공짜로 재생산할 수 있다. 양육뿐 아니라 노인 부양, 간병 등 돌봄 비용을 생각해 보면, 가족 내 여성의 공짜 노동이 지배자들에게 얼마나 큰 이득인지를 잘 알 수 있다.

그래서 여전히 주류 정치인·언론·광고 등은 여성이 가사노동의 1차적 책임자라는 관념을 부추긴다. 이것은 여성의 저임금을 정당화하고, 남성과 여성 노동계급을 분열시키는 데도 유용하다.

물론 자본주의에서 가족제도가 유지되는 것이 자본가들의 필요 때문만은 아니다. 체제로부터 착취받고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은 가족을 ‘무정한 세계의 안식처’로 여겨 가족을 꾸린다. 현실에서 가족이 개인들의 삶을 억압하고 국가가 가족에 대한 지원을 거의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기대가 무너지곤 하지만 말이다.

때때로 경제 위기와 양극화가 낳는 부담을 개별 가정에게, 여성에게 떠넘기는 데 ‘가족 가치’를 앞세우는 것은 아주 효과적이다.

물론 지배자들은 실제로 여성들이 아예 일터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기를 바라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여성들은 노동력의 중요한 일부다. 그럼에도 ‘가족 가치’ 강조는 여성의 이중 부담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예컨대, 이명박에 이어 박근혜 정부는 “일·가정의 양립”을 위해 여성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면서 ‘유연한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여성이 가정을 책임지면서 틈틈이 저임금을 받아 가며 일도 하라는 말과 다름없다.

흔히 이런 ‘가족 가치’ 강조는 동성애자와 비혼모 등 이른바 ‘정상 가족’을 꾸리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난다. 특히 이런 마녀사냥은 경제 위기 시기에 광범한 사회 불만을 다른 데로 돌리는 효과도 낸다.

그러나 범죄와 가족 해체의 연관성에 관한 이런 주장이나 연구들은 대부분 ‘빈곤’이 둘의 공통요인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무시한다. 그래서 ‘빈곤’을 해결할 복지 확충 같은 국가의 책임을 언제나 비껴가게 만든다.

사실 진정으로 ‘가족 해체’를 막으려면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매우 취약한 사회안전망과 불안정한 저질 일자리 등은 노동계급 가정을 빈곤의 나라 옴으로 떨어뜨리고, 가족 내의 긴장과 불화를 낳는다.

그런데 모순이게도 ‘가족 가치’를 강조하는 자들은 실질적으로 노동계급 가정의 처지를 개선하기는 조처들에 반대한다. 《조선일보》는 폭박촌 노인들의 열악한 교차로를 만들었다. 이런 맥락에서 ‘가족’을 이 간극을 메워야 한다는 요구를 낼 것이다. 부모들은 이전에는 정부가 지원했던 학교 물품들을 위해 돈을 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았다. 부모들은 매일 밤 아이들의 숙제를 해 주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다고 요구받았다. 이런 일을 하지 못하는 부모들(주로 일하는 엄마들)은 아이에게 관심을 없다고 비난당하고 아이의 성을 떨어뜨리는 데 대해 비난받았다.”

이렇듯 경제 위기와 양극화가 낳는 부담을 개별 가정에게, 여성에게 떠넘기는 데 ‘가족 가치’를 앞세우는 것은 아주 효과적이다.

이현주



추천 소책자·책

《매떡이들을 위한 여성해방 가이드 — 여성차별과 자본주의》 주디스 오어 지음, 이나라 옮김, 노동자연대책방, 91쪽, 3천 원

《여성해방과 혁명》 토니 클리프 지음, 이나라·정진희 옮김, 책달피, 463쪽, 1만 5천 원

《낙태, 여성이 선택할 권리》 정진희·최미진 지음, 노동자연대책방, 38쪽, 2천5백 원

이집트 혁명의 진로와 사회주의자들의 과제

무슬림형제단의 위기와 다가올 폭풍

사메 나기브 이집트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 활동가

최근 몇 달 동안 수많은 이집트인들이 대통령 무함마드 무르시와 그가 밀어붙인 헌법에 반대해 시위를 벌였다. 이집트의 지도적인 혁명적 사회주의자 사메 나기브는 자유주의 세력과 무슬림형제단이 거리와 작업장에서 벌어지는 운동에서 영향력을 잃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상황을 분석하려면 우리는 무슬림형제단과 이른바 “세속적” 자유주의 야당 세력들이 처한 위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부분적으로, 이 위기는 이집트 혁명의 성격에 대한 양 진영의 오판에서 비롯한다. 예를 들어, 자유주의 성향의 저술가들은 1974년 스페인 민주화 운동, [1990년대 초] 동구권의 “민주주의 이행”, [2000년대] “색깔 혁명”들을 거론한다.

하지만 1930~39년 스페인 혁명이 [이집트 혁명에는] 더 적절한 유비일 것이다. 대중의 참여 측면에서는, 1917년 러시아 혁명이나 1789년 프랑스 혁명보다 이집트 혁명의 규모가 더 크다.

프랑스 혁명 때는 프랑스 인구의 3~4퍼센트가 시위와 대중 집회에 직접 참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러시아 혁명 때는 약 7퍼센트로 추산된다. 이집트 혁명에는 인구의 18퍼센트 이상이 참가했다.

이런 규모의 혁명이 제한적이고 피상적인 민주적 전환에서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다. 소수에게 집중된 부와 권력을 다수에게 나눠 주라는 요구를 피할 수 없다.

위기의 뿌리

무슬림형제단*이 겪고 있는 위기의 뿌리는 바로 여기에 있다. [지난 연말 수십만 명이 참가한] 헌법을 둘러싼 시위들은 단지 민주주의 수호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 투쟁들은 무슬림형제단이 부추긴 기대가 꺾이자 대중의 분노가 터져 나온 것이다. 대중은 삶이 더 나아지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무슬림형제단의 문제는 그들이 대기업과 국가 기구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군부·경찰과 대농고 동맹을 맺고 있다. 새 헌법의 군 관련 조항은 군의 권한을 모두 존속시켰을 뿐 아니라 강화·확대한다.

진정한 변화를 이루려면 이집트 국가를 존속시켜서는 안 된다. 국가는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집트에서 국가의 이런 구실은 장교 훈육 과정의 성격과, 군 장성과 기업주들 사이의 얽히고설킨 유대 관계 때문에 더 강하다. 따라서 군 장성들의 이익을 건드리지 않은 채 대기업 이익에 손을 대기는 불가능하다.

이집트 혁명의 목표를 가운데 하나는 부패 청산이다. 그러나 지금껏 어느 누구도 군대의 권력과 특권에 손을 대지 못했다. 군부의 경제 제국은 바뀌지 않았다. 군부가 경제의 15~20퍼센트를 통제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추정치다.

군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민간 자본과 긴밀히 얽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자유주의 성향의 기업가 나기브 사위리스가 소유한 거대 경제 제국의 일부인 오라스콤 건설은 오랫동안 군부와 광범하게 협력해 왔다.

[새 헌법에 따르면] 국방 예산은 토론을 거치지 않게 돼 있고, 예산 배정의 책임은 장성들 본인이 다수를 차지한 위원회에 있다. 장성들은 민간인을 군사 법정에 세울 권한을 여전히 갖고 있다. 우리는 군부가 여전히 이집트에서 헤게모니적



사진 기기 예브라힘



하리모우트 동맹 사진

혁명적 투혼이 식지 않고 있는 이집트에서 점차 전선이 뚜렷해지고 있다

(위) “무르시는 빈 강통이다” – 올해 혁명 2주년 반정부 시위. (아래) 지난해 12월 4일 대통령궁을 에워싼 시위대.

구실을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무슬림형제단과 군부 사이의 합의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장성들은 무슬림형제단의 인기를 이용해 혁명을 누그러뜨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무슬림형제단은 군부의 기존 구실을 보장하는 대신 권력을 나눠 갖기를 원했다.

그러나 2012년 12월이 되자 거리 운동에서 무슬림형제단의 영향력이 그전까지의 예상보다 훨씬 약하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무슬림형제단은 투쟁의 여파 속에서 위기에 빠졌고, 그들이 발표한 반쯤 정신 나간 성명서를, 지지자들을 동원하려고 종파주의에 의존하는 모습, 스스로 살라피주의자들의 품에 안기는 모습에서 그 위기가 표현됐다.

군 장성들은 이런 상황 전개를 두려움

속에서 지켜보며 이렇게 생각했다. “우리 운명은 이 자들에게 달려 있어! 만약 이 자들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때는 어떡하지?”

무슬림형제단과 자유주의자들은, 군부·대기업과 맺은 합의를 파기하지 않는 한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제한적 개혁을 시작조차 하기 힘들다는 사실에 곤란함을 느낀다. 세계경제가 성장하던 1950~60년대에는 개혁주의적·포퓰리즘적 정책들을 도입할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 진정으로 진보적인 조세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한 병원, 학교, 주택에 돈을 쓰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 무슬림형제단과 자유주의자들은 심지어 무바라크와 직접 결탁했던 부패한 독과점 기업들을 재국유화하는 데도 반대한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묻는다. “대체 어디서 돈을 마련할 것인가?” 이집트에 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집트에는 1천 개의 억만장자 가문이 있다. 이 자들이 돈을 내게 만들지 않는 한 아주 작은 사회정의조차 획득할 수 없다.

우리는 좌절할 이유가 없다. 이집트 혁명이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자신감을 가질 매우 중요한 근거들이 있다. 그중 첫째는 무슬림형제단이 정치적 신뢰와 사회적 기반을 잃어버

린 속도가 빨랐다는 점인데, 이는 그들이 개혁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슬림형제단에 권력을 주면 상황이 나아지리라 봤던 사람들은 깊은 좌절과 실망을 느끼고 대안을 찾고 있다.

다가올 폭풍

둘째 이유는 다가올 전문가 사회적 전투라는 점이다. 혁명은 대중 사이에서 엄청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경제 위기와 계속되는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에 사람들의 요구가 충족되지 못했고, 오히려 긴축 조치가 시행됐다.

지난 12월과 1월 알루미눔·담배·제약 노동자들이 벌인 대규모 파업은 다가올 폭풍의 첫 조짐들이다. 다른 한편, 경찰은 파업을 파괴할 새로운 권한들을 부여받았다. 명백하게도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좌파는 파업들을 서로 이어줄 방법을 찾고, 파업들을 정치화하고, 경제적 요구와 정치적 요구를 연결해야 한다.

우리가 수행해야 할 다른 전투들도 있다. 무슬림형제단이 단지 노동자들만 공격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기독교도를 겨냥한 비열한 중상모략이 펼쳐졌다. 이에 대응해 기독교도 청년들이 대규모로 조직되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가난한 지역 출신들이다. 사회주의자들은 기독교도를 편에 서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집트 혁명이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

좌파는 단결해야 하고, 행동해야 하며,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우리말고는 사실상 아무도 그러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들 역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운동에 참가하고 있고, 차별과 억압에 대한 광범한 반대가 존재한다.

우리가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혁명에서 농촌 지역이 차지하는 구실이다. 헌법안 국민투표 결과는 도시와 농촌 사이의 심각한 양극화를 보여 줬다. 대체로 농촌 지역인 알파이움 선거구에서는 90퍼센트가 찬성표를 던진 반면, 카이로에서는 56.8퍼센트가 반대표를 던졌다.

농촌과 반(半)농촌 지역 주민들은 무슬림형제단 정부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여겨 이슬람주의 헌법을 지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부가 종교적 메시지를 유포하고, 헌법안이 부결되면 치안이 위태로워지고 나라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공포심을 조장한 결과다.

이런 협박과 공포는 모든 혁명에서 나타나는 일이고, 무슬림형제단 이외의 정치세력을 접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좌파가 농민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농민들을 사회적 투쟁으로 이끌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혁명 과정에서 처음 권력을 잡는 세력은 혁명의 목표를 실현할 세력이 아니다. 오히려 무슬림형제단처럼 혁명 이전부터 사람들에게 알려진 세력들이 권력을 잡는다. 우리는 헌법안 국민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을 “무지렁이”나 “문맹”으로 낙인 찍으려는 자유주의자들 내 엘리트 주의적 경향에 완전히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을 설득해서 다음에는 그들이 반대표를 던지기를 바란다. 우리는 무슬림형제단의 기반을 우리편으로 만들기를 바란다. 그 기반이 하층 중간계급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좌파의 죄악과 실수를 때문에 무슬림형제단으로 향하게 된 사람들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좌파는 거듭 다른 조직과 경향들의 공모니를 쫓았다. 1940년대에는 자유주의 성향의 민족주의 정당인 와프드당을, 1950년대에는 나세르를, 1990년대에는 심지어 무바라크를 추수했다.

오늘날에도 일부 좌파 정당들은 과거의 실수를 답습하며, 옛 정권 출신 인사들과 동맹을 맺은 자유주의자들의 공모니를 쫓는다. 우리는 공개적으로 “구국전선”은 재앙이다” 하고 말해야 한다. 이른바 세속주의 야당 세력이 [무바라크의 관료였던] 아무르 무사 같은 옛 정권 잔당들과 동맹을 맺은 사실은, 국민투표에서 무슬림형제단이 찬성표를 이끌어내는 데 가장 큰 구실을 했다.

우리는 현재 상황을 “세속주의와 이슬람주의 사이의 전투”라고 보는 관점을 거부한다. 현재의 전투는 사회적 전투이고, 권력도 재산도 없는 사람들과 모든 것을 가진 자들 사이의 전투다. 자유주의자들은 “세속주의”에 집착하고, 사회적 문제들이 제기되는 것

▶ 11면으로 이어짐

중심부로 번지는 유럽 경제 위기

긴축에 맞서 성장하는 저항과 대안

최근 주류 언론은 입을 모아 그리스의 긴축을 환영했다. 지난해 아테네 증시가 30퍼센트 이상 오른 것은 “국제 채권단이 요구한 개혁을 충실히 이행”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평범한 그리스인들의 삶과 주류 언론의 관심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 줬다.

그리스는 2012년을 거치면서 청년(만 15~24세) 실업률이 50퍼센트에서 62퍼센트로 늘었다. 그리스 통계청은 이런 통계를 2월 중순에 발표했지만 주목받지 못했다. 프랑스·독일의 자본가들은 그리스에 투자한 돈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제 채권단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요구한 살인적 긴축은 경제를 살리지도 못했다. 그리스·스페인·이탈리아 같은 남유럽 나라들뿐 아니라, 이른바 ‘중심부’ 나라들까지 점점 마이너스 성장에 빠지고 있다.

프랑스는 제조업 생산이 2009년 이후 최대폭으로(2.3퍼센트) 줄었다. 유로존의 주축인 독일조차 지난해 4사분기 국내총생산이 2009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그 결과, 2012년은 유로존이 성장하지 못한 첫 해로 기록됐다.

그동안 지배계급은 남유럽 국가들을 ‘돼지들’(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이라고 부르며 알량한 복지와 공공 부문을 위기의 원흉으로 비난했다. 그러나 이윤을 저하로 위기에 빠진 세계 자본주의가 진정한 원흉이다.

올해 초 IMF 수석 경제학자는, 긴축으로 유럽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IMF 정책이 ‘계산 착오’에서 비롯한 실수였다고 발표했다. 그는 정부 지출을 1달러 줄일 때마다 그보다 많은 1.5달러가 유럽 경제에서 사라졌다고 발표했다.

1달러

여러해 동안 각국 지배자들은 평범한 유럽인들의 정서와 생존 조건을 거슬러 트로이카(IMF, 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와 국내의 자본가들의 긴축 요구를 강제해 왔다. 그 결과, 유럽의 주류 정당은 환멸의 대상이 됐고 집권 정부가 흔들리는 정치 위기가 반복됐다.

2월 말 유럽 증시를 패닉에 빠뜨린 이탈리아 선거 결과도 마찬가지다. 지난 2년간 트로이카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

온 몬티는 이번 선거에서 4위로 추락했다. 급락한 투표율을 고려하면 그는 한 자리 지지율밖에 얻지 못했다.

사회자유주의*적인 이탈리아의 ‘중도 좌파’는 몬티 연정에 참가했고, 이번 선거에서도 긴축에 반대하지 않았다. 그 덕분에 코미디언 그릴로가 이끄는 오성(五星)운동과, 부패한 언론 재벌이자 이미 2번이나 총리를 해 먹은 베를루스코니가 긴축에 반대한다며 그 공백을 파고들 수 있었다.

각각 3위와 2위를 차지한 그 둘은 1위 민주당과 득표율 4퍼센트 이내에서 경합을 벌인다. 그래서 민주당의 ‘중도 좌파’ 연합은 정부 구성 자체가 불투명하다.

이를 두고 자본가들의 관점을 대변하는 <파이낸셜 타임스>조차 “이탈리아인들이 긴축을 거부하는 도박을 벌일 뜻을 밝힌 것”이라고 썼다. 독일 총리 메르켈은 시건방지게도 ‘이탈리아인들이 G8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렸다’고 비난했다.

‘아래로부터 디폴트’

스페인에서는 긴축을 자행한 전력 때문에 프랑코 독재 이래 35년간 공식직치를 지배한 두 정당의 지지율이 모두 합해도 50퍼센트가 안 된다. 최근 총리 라호이의 부패 스캔들까지 터져서 스페인 정부의 통치력은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

이런 정부와 유럽 지배자들에 맞서 노동자들은 은행과 투기꾼들의 ‘밀 빠진 독’을 채우는 긴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투쟁하고 있다. 그리스에서 이런 투쟁의 최전선에 있는 혁명적 반자본주의 연합체 안타르시아는 ‘아래로부터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부채 상환을 거부하고, 유로존을 탈퇴하고, 은행과 대기업 들을 노동자 통제 아래 국유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먼저 보지도 못한 채 외국 은행으로 빠져나가는 막대한 돈(이른바 ‘구제금융도 여기에 포함된다)을 노동자들의 임금과 연금, 복지를 지키고 공공요금 인상을 막는 데 쓸 수 있다.

가압류 때문에 승합차에서 생활하는 가족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수익이 안 나는다는 이유로 멈춰선 공장을 재가동해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뒤질 일도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물론 자본주의 이윤 논리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다. 자본가들만을 위한 신자유주의적 유럽연합에 맞서는 이런 대안이야말로 유럽 노동자들의 국경을 넘은 연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

김중환



시업 파업 중인 노동자들을 경찰이 공격한 것이 총파업의 도화선이 됐다 2월 20일 그리스 총파업 시위를 하고 있는 교사들.

점거 파업 중인 노동자들을 경찰이 공격한 것이 총파업의 도화선이 됐다 2월 20일 그리스 총파업 시위를 하고 있는 교사들.

그리스 2·20 총파업

긴축에 맞선 총파업이 그리스를 마비시키다

2월 20일 그리스에서 총파업이 일어나 나라가 온통 마비됐다.

파업 노동자들은 공공 부문 예산 삭감 반대, 민간 부문 임금 삭감 반대, 노동조합 탄압 중단, 물가 인상 통제, 물·전기·가스·철도 민영화 중단 등을 요구하며 행진했다.

이번 총파업은 그리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다시금 몰아붙인 긴축 정책에 맞선 투쟁의 일부였다.

지난해 11월 그리스 의회는 트로이카의 요구에 부응해 1백35억 유로(약 19조 원) 규모의 예산 삭감안을 가결했다.

지난 1월 지하철 노동자들과 선원들이 예산 삭감과 임금 삭감에 항의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지하철 노동자들은 아테네 중앙역 역사를 점거하고 투쟁했다. 이 점거투쟁에 호응해 버스 노동자와 철도 노동자들이 연대 파업에 돌입해 대중교통 전체가 멈춰 섰다.

정부는 파업 노동자들에게 업무 복귀를 명령하는 ‘시민동원령’을 발표했다. ‘시민동원령’을 어기면 투옥될 수도 있는

데, 그리스 정부는 선원, 화물노조, 청소노조 등의 파업에도 ‘시민동원령’을 사용한 바 있다. ‘시민동원령’이 발동된 바로 다음 날, 경찰 수백 명이 점거농성장을 침탈했다.

그러나 경찰의 침탈은 연대의 불씨가 됐다. 경찰의 폭력 진압을 규탄하고 지하철 노동자들의 요구를 지지하는 대규모 연대 파업이 벌어진 것이다. 전력 노동자,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 의료 노동자, 교사 노동자, 지방직 공무원 등이 파업을 벌였다. 1월 31일에는 공공부문의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거리 시위에 참가했다.

파업 확대

그리스 정부는 파업 노동자들을 협박하기도 하고 달래려고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파업 물결은 계속 퍼져 나갔다. 전투적 노조들과 급진좌파들은 2월 20일에 총파업을 벌이자고 호소했다.

총파업 하루 전인 19일부터 신문 기자들과 인쇄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해 언론이 마비됐고, 거의 최초로 농민들도 트랙터를 이끌고 도로를 점거해 총파업에

연대했다. 20일 총파업에는 노조가 파업 조직을 하지 않은 작업장의 조합원들도 자발적으로 거리에 나왔다.

이번 총파업으로 받은 타격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정부는 계속 공격할 것이다. 트로이카는 지난해 11월 예산 삭감안에서 그리스 정부가 밝힌 2만 5천 명 해고안의 구체적 계획을 내놓으라고 그리스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리스 노동자들은 그동안 정부의 긴축 시도를 여러 차례 지연시켜 왔다. 2월 20일 총파업에 참가한 교사 마가리타 파파미나의 말처럼, “지난 3년 동안 정부는 의회에서 이런저런 긴축 조치를 통과시켰지만, 노동자들의 저항 때문에 이 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다.”

파파미나의 다음 말처럼, 그리스 노동자들은 저항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정부는 [긴축을 밀어붙이려] 노조와 좌파 정당들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이런 공격에 더 많은 파업으로 맞설 것입니다.”

김인수

▶ 10면에서 이어짐

을 전혀 원치 않는다. 오히려 자유주의자들은 사회적 권리들을 공격하는 내용이 새 헌법에 포함되는 데 동의했다.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자유주의자들, 즉 군부와의 대결을 바라지 않으며 국가를 지금 그대로 존속시킬 생각인 자유주의자들은 무슬림형제단과 [정부에 참여한] 살라피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적이다. 우리는 규율이 계급 분단선을 따라 더욱 선명해지길 바란다.

혁명을 전진시켜 완수하기를 바라는 모든 청년을 포함해 가장 광범한 의미에서 좌파 세력들은 단결해야 한다. 좌파

세력은 옛 정권과 군부, 무슬림형제단, 옛 정권과 그 잔당들을 옹호하는 일부 살라피주의자들에 맞서 단결해야 한다. 좌파는 노동계급 사이에서, 농민들 사이에서, 기독교도 청년과 여성, [소수인종인] 누비아인 사이에서, 그리고 혁명에 건 자신들의 기대가 충족되지 못한 모든 사회계층 사이에서 전례없이 뿌리내릴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우리의 목표는 대중을 우리편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선거나 국민투표에 기권할 수 없다. 대중이 여전히 선거와 투표를 통해 뭔가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여기는 한, 우리는 선거와 투표에

서 그들을 설득해야 한다.

투쟁을 이끄는 데서 인정받은 좌파의 구실이 의회 선거에서의 지지로 연결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전진하고 있음을 뜻한다. 또한 의회를 살라피주의자들과 무슬림형제단에 맡겨두서는 안 된다. 우리는 순결한 척하며 개입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의회 선거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곧 우리가 의회를 목표를 달성할 수단으로 여긴다거나 이 허울뿐인 민주주의에 만족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선거는 여러 전선들 중 하나이고 우리는 그곳에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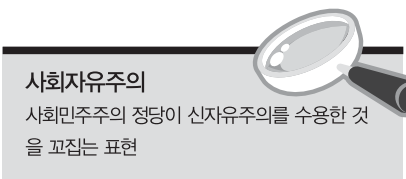
중동 전체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도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항상 혁명은 세계 혁명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는 최근의 연이은 혁명들 속에서 그런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에게는 시리아에서 승리가 필요하다. 튀니지 혁명이 계속돼야 하고, 페르시아 만 인근 나라들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페르시아 만 인근 나라들은 지역 내 반혁명의 중심이다. 사우디 왕가는 이집트 혁명을 직접 공격하고 있다. 바로 이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에서 운동들은 강화하고 성장해야 한다.

다가오는 사회적 분출은 좌파에 역사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좌파 세력은 단결해야 하고, 행동해야 하며,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이집트 국민의 5분의 1이 무바라크 타도를 위해 거리로 나왔고, 첫 대선 이후 겨우 6개월 만에 수십만 명이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참가했다. 이 사람들은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그 어떤 법률과 헌법도 이들을 속박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다가올 혁명은 대중의 요구를 진정으로 대변하는 새로운 헌법을 탄생시킬 것이다.

출처 영국 혁명적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013년 2월호 / 번역 김용민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 자본주의의 논리적 귀결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많은 언론들은 북한이라는 과소망직한 나라와, 김정은 같은 정신 나간 독재자 때문에 우리가 핵이라는 근심거리를 갖게 된 것처럼 설명한다. 북한·이란 같은 나라가 핵을 가지고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고, 미국 등 선진국들은 이런 위험을 해결하려는 것처럼 묘사된다.

그러나 핵무기가 인류에 가하는 위협의 가장 큰 책임은 자본주의 체제와 제국주의 열강들한테 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것을 알 수 있다.

제2차세계대전 막바지인 1945년 8월 6일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떨어뜨렸다. 3일 후 나가사키에도 핵폭탄이 떨어졌다.

핵폭탄이 떨어지면서 10만 명 이상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적어도 10만 명이 화상과 암으로 목숨을 잃었다. 오늘날 25만 명이 대규모 방사능 오염의 후유증에 시달린다.

핵폭탄 공격의 무서운 본질이 드러나면서, 반핵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이 운동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핵공격이 터무니없는 짓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의 최상층 엘리트들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득을 보는데, 왜 체제 자체를 파괴할지도 모를 핵무기를 개발하려 할까?

그러나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자본주의의 논리적 귀결이다.

자본주의는 자원과 이윤을 최대한 얻으려는 다수의 기업과 국가들의 경쟁을 바탕으로 한다. 이윤 축적 중동 때문에 다른 고려 사항들은 무시되기 마련이다.

경제에서 벌어지는 광적인 경쟁은 제국주의적 약탈과 전쟁으로 이어진다. 국가들이 자신들의 힘을 유지하거나 키우려고 싸우기 때문이다.

제1차세계대전과 제2차세계대전은 제국주의 전쟁이었다. 자본주의 강대국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영국은 제1차세계대전에서 ‘머스터드 가스’라는 화학 가스를 사용했다. 머스터드 가스에 노출되면 사람의 몸 안팎에서

출혈이 일고, 피부에 물집이 생기고, 기관지가 상한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일어난 민간인 대학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이는 3년에 걸친 ‘맨하탄 프로젝트’의 결과였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물리학자들이 원자폭탄을 만들기 위해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가했다.

핵폭탄을 어디에 투하할지를 결정한 미국의 표적위원회(Target Committee)는 히로시마를 선택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이 무기의 중요성을 국제적으로 각인시키는 데 [히로시마는] 첫 공격을 충분히 극적으로 보이게 할 것이다.”

미국 지배계급은 세계에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려고 핵무기를 사용하고 싶어 했다.

미국만 무기를 개발한 것은 아니었다. 제2차세계대전 후 냉전이 시작하자, 미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양 진영 간에 갈등이 일어났다.

각 진영은 모두 끔찍한 무기를 보유하고, 그 무기를 사용하겠다고 끊임없이 상대방을 위협했다. 이 점이 냉전 시기 갈등의 핵심이었다.

군비 경쟁

기업들이 이윤을 위해 경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들도 자신의 지배력을 입증하려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점차 더 많은 무기를 축적하게 된다. 이런 모습의 가장 분명한 사례가 냉전 기간에 미국과 러시아가 벌인 군비 경쟁이었다.

지구를 여러 번 파괴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는 여전히 세계 곳곳에 있다. 자본

주의가 발전할수록, 경쟁의 논리는 더 치명적인 무기를 만들어 낸다.

예컨대 미국만이 핵폭탄을 갖고 있을 때, 미국은 핵폭탄이 없는 국가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데 이를 이용했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도 핵폭탄을 보유하게 되자, 미국은 우위를 되찾으려고 더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려 했다.

제2차세계대전 후 수년 만에 새로운 치명적인 무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 중에는 수소폭탄뿐 아니라, 에이전트 오렌지[고엽제의 일종], 네이팜탄, 백린탄, 확산탄, 열화 우라늄탄 등이 있다.

주류 언론은 이란과 북한 같은 “강대국가”가 핵무기를 손에 넣으려 하는 게 “국제 안보”에 위협이라고 떠들어 왔다. 물론 이런 무기는 세상에서 점차 줄어드는 게 좋다. 그러나 강대국과 주류 언론의

주장은 노골적인 이중 잣대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다. 1만 기 이상의 핵탄두, 3만 톤 이상의 화학무기를 갖고 있고, 심지어 탄저균폭탄을 만들고 실험해 왔다. 2002년에 미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에 선제 핵 공격을 할 수 있다고 협박한 바 있다.

그러나 언론은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세계에 가하는 진정한 위협은 못 본 척한다. 그 와중에 강대국들은 대량살상무기를 계속 독점하려고 약소국들의 “위협”을 과대선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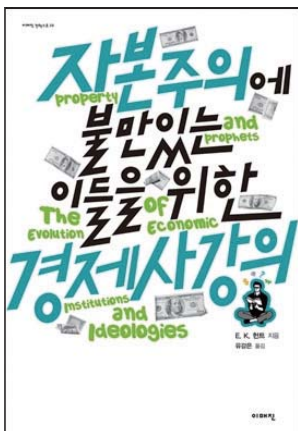
이처럼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를 경쟁적으로 축적하는 게 바로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가 우리를 파괴하기 전에, 우리가 이 체제를 쓰러뜨려야 한다.

주요 핵보유국의 핵무기 보유 상황(출처: SIPRI, 추정치)



서평 《자본주의에 불만 있는 이들을 위한 경제사 강의》

쉽고 재미있게 읽는 자본주의 사상사



EK 헌트 지음, 유강은 옮김
이매진, 3백76쪽, 1만 6천5백 원

이 책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압축적으로 잘 보여 준다. 저자가 설명하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궤적을 보고 있으면, 자본주의 사회의 상식이 결코 자연 발생적이거나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중세 시대에 사회 복지 증진과 무관한 부의 축적은 비난 대상이었다. 물론 이것은 모두 신이 정해 준 사회적·경제적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와 결합돼, 기존 질서를 정당화하는 구실을 했다. 저자는 이런 이데올로기를 “기독교 가부장 윤리”라고 부른다.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성장하는 과정은 기독교 가부장 윤리에 맞서 개인의 탐욕과 축재 욕구를 옹호하는 과정이었다. 예컨대, 프로테스탄티즘은 인간이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될 수 있다는 로마 가톨릭의 교의에 맞서 개인의 믿음으로 구원될 수 있다는 교의를 내세웠다. 이는 새로운 중

간계급 장인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커다란 호소력을 발휘했다. 고전 경제학자들은 개인의 탐욕이 자본주의 시장과 만나면 사회 전체에도 유익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책은 머릿속 관념의 변화가 자본주의를 불러왔다는 베버식 설명을 넘어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형성이 가능했던 사회·경제적 조건을 설명한다. 중세 시대에 소 대신 말을 농업에 이용하거나 삼포제를 도입해 이룩한 생산력 발전, 이를 통해 발전한 원거리 무역, 농촌과 도시의 기능 분화가 어떤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낳았는지 자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자본주의도 모순에서 자유롭지 않은 체제였다. 자본주의가 낳은 끔찍한 현실과 노동계급의 저항 속에서 체제를 비판하는 사상이 발전했다. 많은 사회주의자들은 시장 자체가 악폐를 낳고, 시장을 넘어서 협동적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이를 근절할 수 있다고 봤다.

여러 체제 비판가들의 사상 중 마르크스주의는 가장 중요하다. 저자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흔한 오해들을 짚고 넘어가는 것도 잊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마르크스주의가 다른 사회주의 사상에 견줘 어떤 강점이 있는지도 보여 준다.

마르크스주의

엘리트주의에 빠져 버린 나머지 제국주의를 지지한 일부 페이비언주의자들, 선거에서 표를 얻는 데 치중해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른 수정주의자들과 달리, 혁명적 마르크스주의가 어떻게 일관되게 체제에 맞서 싸워 왔는지도 보여 준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부의 집중이 두드러졌지만,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상대적으로 무기력한 소규모 행위자들로 구성된 사회”라는 전제를 토대로 이론을 전개했다.

부르주아 경제학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큰 나머지 지배자들은 “기독교 가부장 윤리의 봉건적 형태와 뼈대”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만들기도 했다. 이 이데올로기는 “재벌들이 자연적으로 우수하며 대중을 돌보는 가부장 같은 구실을 한다”고 역설했다. 물론 이 또한 지배자들이 자신의 부를 정당화하는 방법이었을 뿐이다.

저자는 다양한 자본주의 옹호론과 그에 대한 비판, 그리고 아래로부터 저항을 상세하게 다룬 뒤, 사회주의의 ‘밝은 전망’을 언급하며 책을 마무리한다.

이 책은 서구 경제 이데올로기의 역사라는 커다란 주제를 한 권에 잘 압축했다. 또 기존 경제 서적에서는 잘 거론되지 않는 비판적 사상가들의 논의도 함께 설명했다. “자본주의에 불만”이 있고 자본주의 옹호자들의 논리를 반박하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 보라.

이원웅

노동자와 환경을 희생시킬 전력·가스 민영화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가 전력·가스 민영화를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지식경제부는 SK, GS, 삼성 등 재벌이 석탄·LNG 화력발전소에 대거 참여시키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6차 수급계획)을 내놴

이처럼 재벌들이 발전 사업에 대거 뛰어드는 이유는 정부 후원으로 20~30년간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이래 한국 정부는 '자유시장' 도입이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라며 전력 민영화를 추진해 왔다.

한국전력공사(한전)에서 발전소들을 분할해 발전 공기업을 만들고, 한전이 각 발전소 전기를 사오는 '전력 거래 시장'을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재벌들의 발전소 건설을 허용했다.

그러나 '전력 거래 시장'이라는 것은 재벌 발전소의 이익을 보장하는 제도일 뿐이다.

원래 화력발전소의 원료 가격은 1킬로와트시당 석탄(50~60원), LNG(1백50~1백80원), 디젤(4백 원) 순인데, 한전이 디젤발전소 전기를 구입하면 그 가격 수준에서 다른 모든 전기 가격이 결정된다. 그래서 재벌들이 갖고 있는 석탄·LNG 발전소는 원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전기를 팔 수 있어 큰 차익을 남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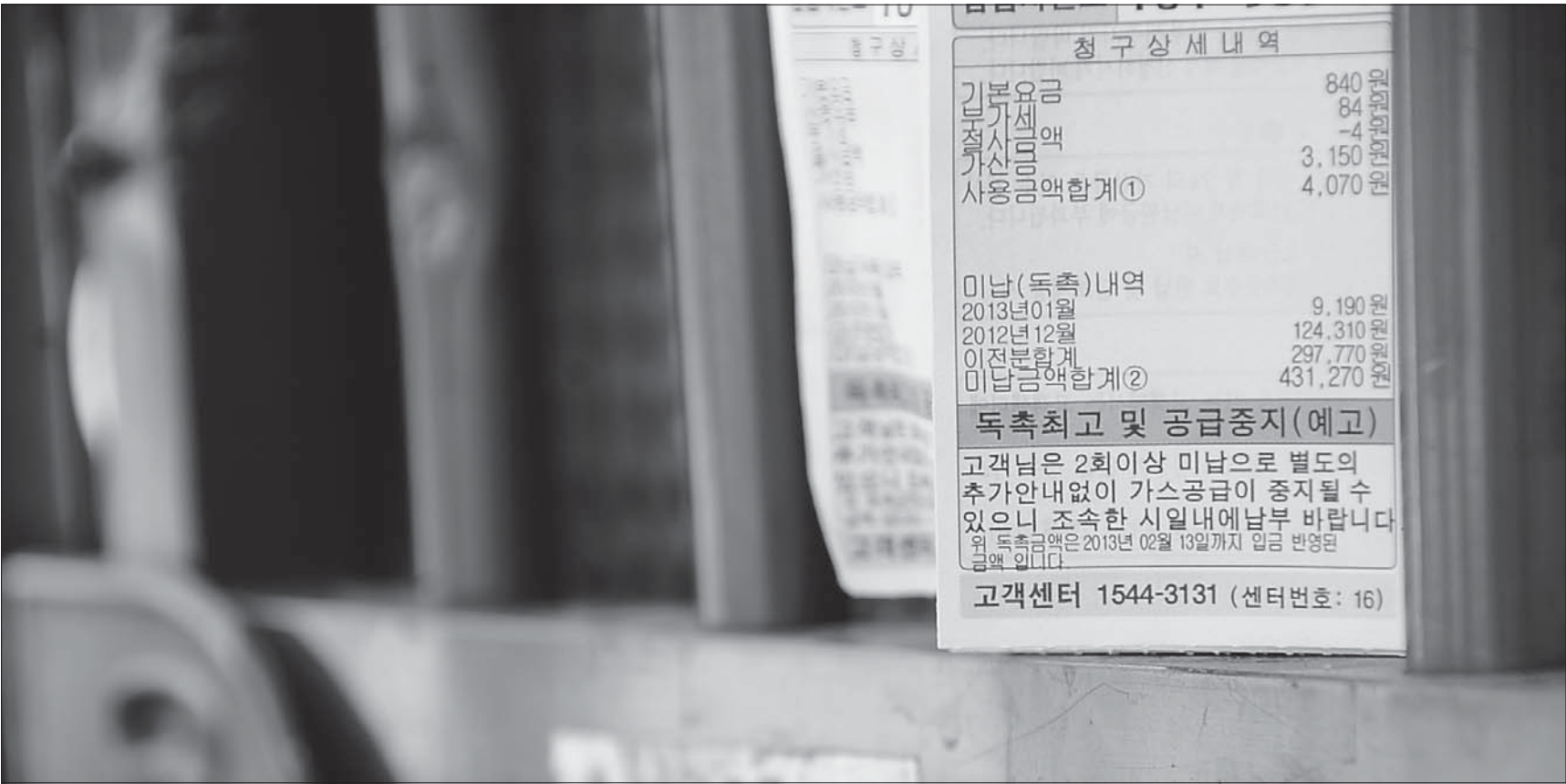
게다가 한전이 디젤발전소 전기를 구입해 전기 단가가 오르면, 정부가 규칙에 따라 발전 공기업들은 전기를 할인해 팔아야 하지만 재벌 발전소들은 이익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다.

그래서 2012년에 발전 공기업들은 1킬로와트시당 80~1백10원 정도에 판매했지만, 재벌 발전소들은 평균 1백89.46원에 팔아 폭리를 얻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가 전력 민영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재벌들에게 수익성 있는 사업을 보장해 주려는 의도 때문이다.

4대강 사업 이후 정부 발주의 토목공사 물량이 줄어들고 주택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건설업체들의 부도 위험이 커져자, 한국 경제 전체가 타격을 받을 위험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재벌 건설사들에게 특혜를 베풀 것이다.

한편, 6차 수급계획으로 재벌들이 LNG 발전소를 대거 늘리게 되자, 발전



전력·가스가 민영화되면 가정용 전기·가스 요금은 더욱 치솟을 것이다.

사업과 도시가스 사업을 함께하고 있는 재벌들은 나아가 LNG를 직접 수입할 수 있게 해달라며 가스 민영화까지 요구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한국가스공사만 LNG를 수입할 수 있다.

녹색 성장

그러나 LNG를 재벌들이 직수입하게 되면,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은 더욱 오를 가능성이 커진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 인수위도 천연가스의 “민간 직수입 활성화”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다.

전력·가스 민영화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도 무력하다.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을 떠들었고, 2009년 12월에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는 이명박이 직접 참석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의 30퍼센트를 줄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6차 수급계획에 따라 재벌들이 짓기로 한 발전소 12곳 중 8곳이 석탄 발전소다. 석탄 발전은 원료비가 싸 재벌들은 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지만, 오염물질과 기후변화를 낳는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배출한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절대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환경부조차 6차 수급계획을 비판하고 있다.

게다가 6차 수급계획은 위험천만한 핵발전도 계속 확대하는 계획이다. 6차 수

급계획은 2025년까지 건설이 예정된 핵발전소를 계속 짓기로 했을 뿐 아니라 수명이 끝나는 핵발전소 8기도 계속 가동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전력·가스 산업을 재국유화하고 정부가 풍력·태양광 발전 같은 재생에너지를 대거 지원해, 노동자·민중이 값싸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강동훈

민영화 추진한 총리를 쫓아 낸 불가리아 민중

2월 10일 불가리아에서 전기요금 폭등에 항의하는 시위가 시작됐다. 1월에 고지된 전기요금이 지난해 1월에 견줘 갑절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고지서를 불태우며 격렬하게 시위를 벌였다. 1997년 이래 최대 규모 시위가 이어졌고, 열흘 만에 총리 보이코 보리소프는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불가리아는 유로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평균 월급이 4백 유로(약 57만 원)밖에 안 되지만 전기요금은 유럽연합 평균보다 높다(구매력 기준).

그러나 역설이게도 불가리아는 발칸반도 지역 최대 전력 수출국이다.

불가리아는 2000년부터 국영 전력 기업을 분할·매각하며 민영화를 시작했고, 2007년부터는 전력과 가스 시장을 민간 기업에 전면 개방했다.

불가리아에서 전력 배급은 외국 기업 세 곳이 독점하고 있었고, 이 기업들의 수익율이 2백~2백50퍼센트에 이른다는 얘기도 있다. 이번 시위의 압력에 밀려 불가리아 정부는 전력 배급 업체 한 곳과 계약을 파기했다.

한편, 2월 16일 스페인 16개 도시에서는 병원 민영화 시도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지방정부들은 공공부채를 줄이려면 병원을 민영화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시위 참가자들이 옳게 주장했듯이 “의료는 상품이 아니”고, 병원 민영화는 “공공 서비스를 강탈해 사기업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넘겨주는 것”이다.

불가리아와 스페인에서 우리는 민영화에 맞선 저항의 가능성을 볼 수 있다.

차승일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정치 상황을 이용해 돌파구를 열려면

2월 19일 현대차 정규직지부와 비정규직지회가 포함된 불법파견 특별교섭단은 비정규직지회 독자교섭을 추진한다고 결정했다.

현대차 사측은 “무리한 요구안 고집으로 의견 조율 실패, 특별 협의도 중단” 운운하며 비정규직지회를 비난했다. 보수언론은 “고립무원 자초하는 현대차 하청노조”라며 이 비난에 힘을 실었다.

이런 비난은 뻔히 예상한 것이다. 그런데 정말 야속한 것은 정규직지부 집행부가 연대투쟁을 강화하지는 않고 오히려 비정규직지회에 요구안(정규직 전환 범위와 내용) 후퇴를 강요해 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지회 지도부의 독자교섭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독자교섭을 결정한 지금, 이제 남은 문

제는 비정규직지회가 효과적인 투쟁 방법을 택하는 것이다. 2월 20일 비정규직지회 정대위 소식지는 “교섭을 성사하기 위해 본격적인 파업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 파업은 점거파업이어야 한다.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다. 게다가 현대차 사측의 1차 신규채용 강행으로 현장 분위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점거파업은 분명히 어려운 결정일 것이다. 총분치 않은 파업 참가자 규모로 탄압의 우려도 클 것이고, 아예 성사 자체에 대한 고민도 들 것이다.

현재 조건에서 이런 어려움과 고뇌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작업장 분위기만이 아니라 전 반적인 정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면 어렵더라도 돌파구가 만들어질 여

지가 있다. 실제로 효과를 내는 투쟁 방법을 택하면 대중적 연대의 초점이 될 수 있다.

대중적 연대의 정서가 형성되면, 정규직 조합원들의 적극적 지지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가 당선하자 사측이 자신감을 얻어 공세를 강화하는 듯하다. 그러나 정치 상황이 권력자들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나쁘지 않은 정치 상황

이제 막 취임했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벌써부터 복지 공약 후퇴, ‘경제민주화’ 실종, 부패 내각 인선 등으로 흔들리고 있다. 취임하기도 전에 지지율이 득표를 아래로 떨어진 최초의 정부다.

정부조직개편안도 통과시키지 못한 채 출범했다. 줄줄이 잡힌 장관 인사청문

회도 지뢰밭의 연속일 것이다.

결국 당분간 정치적으로 어수선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저들이 전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가 치고 나갈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박근혜가 벌써부터 위기인 것을 보고 그동안 대선 패배감에 의기소침해 있던 사람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

게다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에 대한 지지는 여전히 크다. 민주노총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2월 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1.5퍼센트가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지지했다.

최근 대법원이 한국GM(구 GM대우) 창원공장의 모든 공정을 불법파견으로 판정한 것도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이다. 이제 검찰도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수

사에서 더 큰 압력을 받게 됐다. 이런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시간을 끌면 끝수록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 사측은 2차 신규채용을 강행할 수 있다. 그래서 노동자들을 더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려 할 것이다.

실제로 효과를 내는 진정한 대안이 없으면 사방에서 밀려오는 압력에 더 많은 사람들이 흔들릴 수 있다. 이미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에서 후퇴했는데, 또 다시 2차·3차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말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제대로 맞붙어 싸워 보지도 못하고 맥없이 쓰러지는 것은 이후 투쟁을 위해서도 효과적이지 않다.

쉽지 않은 결정이겠지만, 주저하고 머뭇거릴 시간이 많지 않다.

허수영 노동자연대다함께 울산지회 활동가

소식·보고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3월 13일(수)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Report@left21.com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해고의 사슬을 끊어야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을 앞두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더기로 해고되고 있다. 해고자 수가 교과부의 실태 조사로만 6천4백75명에 이르고,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교사, 학습 보조교사 등 조사에서 누락된 인원까지 더하면 거리로 내몰리는 학교비정규직은 1만여 명에 이른다.

6년간 여섯 번 해고 당한 특수교육보조원, 학생 수가 교차 열세 명 줄었다고 해고된 조리원, 7년간 일한 학교에서 문자메시지로 해고된 노동자 등,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려고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를 새로운 비정규직 노동자로 교체하는 ‘돌려막기’도 만연하다. 심지어 무기계약직도 해고해, 올해만 그 규모가 1천1백18명(전체 해고자의 17.3퍼센트)이나 된다.

최근 벌어진 전문상담사와 학습보조교사 2천여 명 대량 해고는 당국이 얼마나 노동자들을 일회용 소모품처럼 취급하는지 보여 준다. 학교 폭력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상담과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전문상담사와 학습보조교사를 채용해 놓고는, 1년 만에 예산을 대폭 삭감해 노동자

들을 해고한 것이다. 노동자들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학교 폭력을 해결할 최소한의 의지도 없는 것이다.

정규직 전환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해고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그동안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 곳곳에서 교육에 꼭 필요한 일을 수행해 왔다. 따라서 학교비정규직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마땅하다.

이는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뿐 아니라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전체 교직원들의 3분의 1에 이르는 비정규직의 상시적 고용불안을 외면하면서 ‘공교육의 질 개선’ 운운하는 것은 기만이다.

공교육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으로 뭉쳐 교육감 직접고용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싸워 왔다. 지난해 투쟁과 파업으로 정규직 전환을 위한 ‘교육공무직 법안’도 발의됐다. 진보정당들은 물론이고 민주통합당조차 동의하는 만큼 정부와 여당이 의지만 있으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박근혜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43퍼센트를 차지하는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없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말하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공약 이행을 위해서라도 당장 정규직 전환에 착수해야 한다.

그런데 공약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박근혜의 말 바꾸기가 시작된 듯하다. 이미 국정과제에서 정규직 전환 시점(2015년)을 삭제한 것도 불길하기 짝이 없다. 위기와 불안정이 심화될수록 후퇴의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힘과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

학교비정규직 노조들은 3월 농성투쟁과 6월 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지난해 말 서울 도심 집중 집회와 파업은 학교비정규직 쟁점을 사회적 이슈로 올려 놓았고, 노동자들의 조직과 의식도 성장시켰다. 일부 교육청에선 교육감 직접고용과 노동조건 개선 등의 단체협약도 따냈다.

정부의 말바꾸기가 계속될수록 기층의 분노도 커질 것이고, 이는 투쟁의 자양분이 될 수 있다. 단결과 연대로 올해도 투쟁을 이어가자.

조명지

▶ 관련 기사 16면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없이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은 기만이다 2월 21일 서울시 교육청 앞 학교비정규직 해고 사태 해결 촉구 집회.

예고되는 연금 개악 시도

공무원연금은 ‘특혜’가 아니다

정부가 또다시 공무원연금 개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기초연금 등의 복지 재원 일부를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마련하려는 듯하다.

마침 5년마다 재정추계를 새로 해서 법을 개정하는 시점과 맞물려 있어, 언론의 ‘공무원 특혜’ 공격도 이어지고 있다.

기초연금 재원 논란이 한창이던 1월 말, 〈조선일보〉사설은 “새 정부 임기 초반에 공무원연금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해서 매년 27조 원이 필요한데, 당장 올해만 공무원연금 지급을 위해 2조 원이 필요하니 군침 흘릴 만하다.

게다가 기초연금을 둘러싸고 국민연금 대상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번지는 가운데, 올해는 국민연금 개악도 해야 할 판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더 많이 받는 공무원연금의 강도 높은 개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지난해부터 언론은 공무원연금 개악을 주문하고 있는데, 최근 〈한겨레 21〉은 “받는 연금에서 자신이 이미 낸 보

험료를 뺀 순연금액을 비교하면 공무원연금 가입자 ㄴ씨(1억 4천8백49만 원)가 국민연금 가입자 ㄱ씨(8천7백47만 원)보다 1.7배 많은 셈”이라며 “어마어마한 세금이 … 특수지역의 노후생활을 보전하는 데 들어가”므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했다.

물론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많이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연금만 두고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한겨레21〉기사대로 국민연금보다 더 받는 공무원연금을 월급으로 바꾸면 한 달 17만 원 정도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발표된 ‘2012년도 민관보수수준 실태조사’를 보면, 대졸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는 1백 인 이상 사업장의 69.3퍼센트에 불과하다. 〈한겨레 21〉이 인용한 수치의 원 작성자인 김상호 교수가 2008년 작성한 자료를 보면, 1백 인 이상 작업장의 노동자 월 평균 임금은 3백80만 원이 넘는데, 같은 계산법에 따르면 공무원 월급이 1백20만 원이나 적고, 국민연금보다 더 받는 공무원

연금의 순연금액을 더해도 여전히 1백만 원이 적은 셈이다.

따라서 ‘특혜’는커녕 정부는 지금 당장 공무원 보수를 인상해야 한다.

사실이 이런데도 끊임없이 공무원연금을 ‘특혜’로 몰아가는 것은 규모가 더 큰 국민연금을 개악하기 위해서기도 하고, 복지 재원을 기업과 부자들에게 부담지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기도 하다.

이처럼 기초연금 등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공무원연금을 개악해도 결국 노동자 전체 소득은 늘지 않는다. 이는 전형적인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로, 노동자 전체의 복지 확대와 무관하다.

당장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법인세 감면 등으로 20대 대기업 자산은 5백26조 원이 늘었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필요한 복지예산의 네 배에 가깝다. 따라서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과 부자들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지, 공무원연금 개악처럼 노동자끼리 나눠 갖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박천석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사무처장

국민대

입학식장에 올려 퍼진 등록금 대폭 인하 목소리

2월 22일 국민대학교 입학식이 열렸다. 이에 맞춰 “부실”대학 선정 철회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국민대 대책위’가 주도해 등록금 대폭 인하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대책위 학생들은 등록금 대폭 인하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준비했고, 크게 발언하며 유인물을 뿌렸다.

학교 측은 경비를 동원해 입학식장에 들어가려는 학생들을 가로막았다. 우리가 ‘재학생이 왜 신입생들의 입학축하하는 자리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냐?’ 하고 항의하자, 학생지원팀(‘학생탄압팀’이 더 어울린다)은 “너희들을 믿을 수 없다” 하고 어이없는 말을 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민대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려고 발로 뛰어가며 투쟁한 우리는 입학식장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책위의 학생들은 포기하지 않고 셋길을 통해 입학식장 안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

우리는 식당 안에서 “총장님! 최고의 입학 선물은 등록금 대폭 인하입니다!” 하고 적힌 현수막을 2층에 펼쳤다. 현수막이 펼쳐지자 신입생과 학부모 등이 함께 박수치면서 환호성을 질렀고, 총장과 처장단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통쾌한 한 방을 먹인 것이다!

우리는 입학식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큰 소리로 학교 당국을 폭로했다.

많은 학생들이 입학식이 끝나고 격려와 지지의 메시지를 대책위에 남겨 줬다. 고액 등록금에 1백만 원에 가까운 입학금까지 내야 하는 신입생들의 고통이 광범하다는 것을 확인한 날이었다.



2월 22일 국민대 입학식

이번 시위는 학교 당국이 학생들의 반대에도 등록금 2.6퍼센트 소폭 인하를 강행한 상황에서 일어났다. 지난해 국민대는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됐는데,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더 큰 폭으로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

2011년에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 추계예대는 등록금 10퍼센트를 인하했고, 2012년에 선정된 서라벌대는 12퍼센트를 인하했다. 국민대는 이런 선례에도 불구하고 2.6퍼센트만을 인하하면서 ‘서울 사립대 중 최고 인하율’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입학식 날 학생들의 반응은, ‘최고 인하율’이라는 학교의 선전이 얼마나 군색한지를 잘 보여 줬다.

앞으로도 이런 분노가 실제 등록금 대폭 인하를 만들 힘이 될 수 있도록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권혁민 국민대학교 학생

우리금융

대량 해고 부를 우리금융 민영화 반대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금융 민영화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2001년 3월 12조 7천여억 원을 투입해 우리금융을 설립한 후, 5조 6천여억 원을 회수했다. 남은 7조 1천여억 원을 회수하려고 이명박 정부는 세 번이나 매각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우리금융의 시가총액은 10조 원 정도다. 정부는 지분을 일괄 매각해 최대한 비싸게 팔려고 한다.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론스타의 선례 때문에 해외자본에 우리금융을 팔아치우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정부는 KB금융이 인수합병하기를 바란다. KB금융은 사내 유보금만 5조 원을 가지고 있다.

이미 1월 말 우리금융 회장 이팔성이 ‘우리금융 일괄 연내 매각’ 가능성을 언급했다. 전 금융위원장 김석동은 2월 22일 한 인터뷰에서 “KB금융이 우리금융을 인수하면 효율적인 은행이 탄생할 것”이라고 했고, 25일 이임식에서도 “우리금융 민영화는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지형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게다가 ‘각종 복지 공약을 증세 없이 실현해야 하는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 우리금융 민영화는 재원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공적자금 회수의 명분과 함께

7조~8조 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우리금융을 민영화하고 싶어 할 것이다.

문제는 양 금융의 합병으로 수많은 노동자가 은행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KB국민은행에 2만 2천여 명, 우리은행에 1만 5천여 명의 노동자가 있는데, 합병을 하면 8천~1만 명이 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노동자들을 쉽게 정리해고할 수 있게 법도 보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우리금융 노조는 현재 매각에 반대하고 있다. 물론, 우리금융 노조 지도부가 제시하는 우리사주와 국민주 모집 등의 대안이 효과적일지는 의문이지만 말이다.

KB금융 노조도 1월 30일 대의원대회에서 ‘구조조정 시 총력 투쟁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우리금융 노조와 연대한다’고 결정했다.

2010년 말 KB금융지주 회장 어윤대의 칼날 아래 KB국민은행에서 3천2백44명이 구조조정된 바 있다. KB금융과 우리금융이 합병한다면 더 큰 고통이 이어질 것이다.

수많은 노동자들을 직장에서 쫓아내고, 금융 공공성을 훼손하는 우리금융 민영화를 막아야 한다.

김동규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 조합원

독자토론광장

Letter@left21.com

3월 13일(수)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눈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실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습니다.

티베트 출신 이주민의 항변 “짓지도 않은 죄를 가지고, 벌금을 내라니요”

그동안 지지와 연대를 보여준 많은 동지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명동도시환경정비사업(명동 재개발)로 인해서, 제가 운영 중이던 티베트 음식 전문점 ‘포탈라 레스토랑’이 강제 철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생존권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동지들의 연대와 지지로 청계천으로 옮겨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투쟁 중 벌어진 용역과의 충돌 과정에서 짓지도 않은 죄의 누명을 쓰고 1년이 넘도록 재판을 했습니다. 2월 15일이 선고일이었습니다.

호주, 일본 등과 수도권, 지방 등 각지에서 7백 명에 이르는 분들에게서 탄원서를 보내 주셨고, 판사님께 당시의 상황과 제가 외국인이라서 겪은 어려움들을 써서 제출했지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기사 95호)

저는 현재 아이 셋을 키우기 위해 귀화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귀화가 결정되기 전에는 지속적으로 출입국에서 결혼 비자를 연장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출입국법상 벌금형 이상의 유죄가 결정되면 귀화 신청도 백지가 되고, 강제 출국 조치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강제 출국을 당하면 향후 5년 동안, 한국에 올 수 없고, 그 후로 15년 동안 귀화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제가 60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인데 정말 걱정입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한국에 티베트의 상황을 알리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와서 인터뷰를 했었고, 한국 내에서 티베트 문제를 다루는 각종 언론·학생들과의 인터뷰도 했습니다. 이주노동자, 다문화 문



홍성민 기자

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 왔습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들은 제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한 투쟁이었습니다. 한국인 아내와 세 아이가 있는데 이러한 법원 판결은 제 가정을 위기로 몰아넣는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짓지도 않은 죄를 가지고, 벌금을 내라고 하는 한국의 법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다문화라고 떠들어 대지만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놓인 외국인 한 사람이 당하는 이 모든 상황에 한국 정부의 다문화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검찰을 상대로 고소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항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연대, 지지를 호소합니다.

더불어 다시 티베트인들의 분신이 시작됐습니다. 2월 20일 10대 청년 2명이 분신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지속적으로 티베트 문제에도 힘을 실어 주십시오. 뽀겔로! (힘내라 티베트!)

민수

2005년 일본 JR 후쿠치야마 선 탈선 사고 민영화는 왜 재앙인가

2005년 4월 25일, 일본 효고현의 아마가사키시에 있는 JR 서일본 소속 후쿠치야마 선에서 사상 최악의 철도 사고가 발생했다. 출근 시간에 운행하던 전동차가 탈선해 아파트에 충돌해 승객 1백6명과 기관사 1명이 사망하고 5백62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사고의 표면적인 원인은 기관사의 과속으로 인한 탈선이었다. 해당 열차의 기관사는 운전 경력이 11개월 정도인 신입 사원이었는데, 열차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사측으로부터 여러 차례 질책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일에도 사고 현장의 바로 전 역에서 열차를 제대로 정차시키지 못해 운행 시간이 많이 지연된 상태였다. 기관사는 이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으로 속도 70km를 준수해야 할 곡선 구간을 무려 116km로 진입하려다가 이런 참극을 낳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윤을 위해 효율만을 앞세워 철도를 경영한 일본의 민간 철도 회사들에게 있었다.

사건의 핵심인 JR 서일본이 속해 있는 지역은 일본의 대도시들인 교토, 오사카, 고베, 사카이 등이 모여 있어 인구가 1천 9백만 명에 이르는 곳이다. 운송 분야에서 매우 많은 수요가 있는 시장인 것이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만 JR 서일본을 포함해 11개가 넘는 철도 회사가 단 한 명의 승객이라도 더 끌어들이려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철도 회사들은 운영비를 줄이려고 경력이 있는 기관사들을 퇴직시키고 신규 기관사들을 채용해 임금을 줄이거나, 기본적인 보수나 정비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다. 또한 열차 시간표를 초단위로 짜면서 이 시간표를 지키라고 기

관사들을 압박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이나 근신 등의 징계를 주고 있다.

당시 사고를 낸 JR 서일본도 마찬가지로 지었다. 1987년 일본 정부는 ‘경영 합리화’를 이유로 일본 국철을 7개 JR 회사로 분할해 민영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27만 명이던 철도 노동자들 중 7만 명가량이 해고됐고, 민영화 찬·반을 둘러싼 노동자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노동조합의 영향력은 심각하게 약해졌다. 이후에도 JR 각 사들은 ‘경영 효율화’를 내세워 고용을 대거 축소했다.

‘경영 합리화’

특히 JR 서일본은 정년 퇴직자들의 수에만 철저히 맞춰 노동자들을 고용했다. 당연히 이는 노동조건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민영화가 된 지 얼마 안된 1990년에 일본 운수성 운전관계노동 실태조사단에서 실시한 조사를 보면, JR 서일본 소속 기관사의 승무 시간은 평균 1.3배 증가했고, 승무 거리는 1.7배 증가했다.

그래서 JR 소속 철도 노동자들은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바로 순환 근무에 투입되고 있다. 또한 신입 기관사들에게 운전 기술을 전수할 중견 노동자들이 없어지면서, 신입 기관사들은 미숙한 운전 실력을 가지고 바로 강도 높은 현장 업무에 투입되는 실정이다. 해당 사고를 낸 기관사도 마찬가지였다.

더욱이 JR 서일본에는 악명 높은 ‘일근교육’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이 제도는 열차 시간표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정차역에서 정차 위치를 지키지 않은 기관사들에게 가해지는 교육이었다. 이 일근교육을 받는 기관사는 2일이나 3일 정도 근무에서 제외돼 교육을 받는데, 그 교육 기간 동안 해당 기관사는 눈에 잘 띄

는 장소에서 제초차 청소를 하거나 반성문을 작성해야 했다. 이러한 징벌적 사구는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JR 서일본에서 일근교육 제도가 실시되는 동안 20명이나 되는 기관사들이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고를 낸 기관사도 이미 세 번이나 일근교육을 받았고, 사고 당일에도 여러 차례 실수를 하자 다급한 나머지 무의식적으로 속도를 올렸던 듯하다. 또, 모든 전동차에는 제한 속도를 일정 시간 초과하면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작동되는 제동관이 설치돼 있지만, 해당 열차는 제동관이 낡아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여러 모로 후쿠치야마 선의 참사는 일본 정부의 무리한 철도 민영화가 가져온 심각한 폐해였다.

아직 한국 철도는 민영화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지금도 철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코레일 소속 기관사들은 높은 업무 강도 때문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JR 서일본의 ‘일근교육’과 마찬가지로, 코레일에서도 운행 과정에서 실수를 한 기관사들을 강하게 징계하고 있다.

그래서 매년 노동자 수 명이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하고 있다. 중대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고장이나 사고도 매년 수십 차례나 발생하고 있지만 코레일은 운영비 절감을 위해 유지·보수 외주화를 늘려 왔다.

이런 판국에 한국 정부는 KTX를 위시

김동혁

하늘과 땅에서 함께 외치는 구호

업노조 재능교육지부가 비정규직 투쟁 작업장 중 최장기 투쟁 일수를 기록했다. 이는 비정규직 작업장 가운데 가장 오래 투쟁해 승리한 금속노조 기동전자 분회의 투쟁 일수 1천8백95일과 같다. 이날 오후 서울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열린 ‘재능교육지부 투쟁 완전 승리 쟁취를 위한 1895! 집중투쟁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과 종탑에 오른 두 여성 노동자가 마주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이미진

정정합니다

98호에 실린 ‘레닌주의는 끝났는가?’ 기사의 번역 오류를 정정합니다. 기사 마지막 문단의 두 번째 문장은 “노동자주의와 노조 관료들에 의존하거나 운동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찬양만 해서는 반자본주의 투쟁은 전진하지 못한다”입니다. 하지만 “노동자주의”라고 번역한 단어의 영어 원문은 “Labourism”입니다. 여기서 ‘Labour’는 영국 노동당(Labour Party)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단어의 올바른 번역은 ‘노동당 개혁주의’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을 “노동당 개혁주의와 노조 관료들에 의존하거나 운동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찬양만 해서는 반자본주의 투쟁은 전진하지 못한다”로 교정합니다.

〈레프트21〉 100호 출간을 축하해 주세요!

오는 3월 18일 〈레프트21〉 100호가 발행됩니다. 다음호 신문에는 100호를 기념해 특집 기사를 싣고, 독자들의 목소리와 축하 메시지도 담을 예정입니다. 100호 맞이 정기구독과 후원 사업도 진행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3월 개강 맞이 대학 마르크스주의 포럼
대학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새시대를 준비합니다
3월 23일(토) 2시 ~ 3시 40분
박근혜 정부의 앞날과 진보운동의 과제
연사 전지윤 (진보언론 〈레프트21〉 편집자)

2
3월 23일(토) 4시 ~ 5시 40분
유로존 위기, 미국 재정 절벽, 흔들리는 중국 경제 — 고장 난 자본주의와 마르크스주의
연사 이정구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3
3월 24일(일) 2시 ~ 3시 40분
북한 핵 실험 파장과 깊어지는 한반도 위기
연사 김영익 (진보언론 〈레프트21〉 동아시아 담당 기자)

4
3월 24일(일) 4시 ~ 5시 40분
이집트, 튀니지, 시리아... 끝나지 않은 아랍 혁명 — 우리에게 주는 교훈
연사 김종환 (진보언론 〈레프트21〉 국제 담당 기자)

3월 23일(토) ~ 24일(일) 오후 2시 ~ 5시 40분
장소 고려대학교 문과대(서관) 202호
주최 **노동자연대학생그룹** (옛 대학생다함께) <http://stu.alltogether.or.kr>
참가비 **8천 원 (하루 5천 원)** 티켓 구입 문의 **010-5678-8630** (문자도 환영)

철갑 위로, 거리로 내몰리는 노동자들에게

박근혜의 비정규직 대책은 답을 안 주고 있다

“임기 내 반드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

취임식 날 박근혜가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희망 복주머니’ 행사에 참석해 한 말이다.

그러나 박근혜가 ‘희망 복주머니’ 쇼를 벌이며 위선을 떠는 동안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는 멈추지 않았다.

1백40일 넘게 송전탑 위에서 폭설과 칼바람을 견디며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외치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새해 벽두부터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려 ‘해고 철화’를 외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이런 노동자들에게 희망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정부 정책 자체가 위선과 모순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후보 시절부터 내세운 대표적인 비정규직 대책은 두 가지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사내하도급법 도입’.

정부와 보수언론은 이 두 방안이 “차별 해소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포장하지만, 사내하도급법은 이미 “정몽구 보호법”이라고 질타를 받아 온 대표적인 반노동 정책이다. 이 법은 불법파견을 ‘합법’으로 둔갑시켜, 정몽구 같은 자들에게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을 피할 길을 열어 준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와 투쟁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도 진작부터 모순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우선, 박근혜의 약속과 달리, 연초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거 해고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지자체 방관간호사, 도로관리공단, 경복대병원,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정부출연 연구원 등등.

공공기관들은 ‘2년 이상 근무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의무



박근혜가 생색내기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는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하루 전 해고 통지 받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전화 상담 비정규직 노동자들.

를 피하려고 마구잡이식 해고를 일삼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박근혜의 정책도 한 몫하고 있다. 박근혜가 후보 시절 약속한 정규직 전환 완료 시점(2015년) 전까지 인력을 감축해, 정규직화 대상자 규모를 줄이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법’(2년 이상 비정규직 정규직화)이 노동자 대량 해고로 이어졌던 “2007년의 악몽”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둘째, 안 그래도 박근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대다수 노동자들을 배제하는 괴짜적인 내용이었다. 올 초 고용노동부는 이 정책의 대상자 규모가 10만 명이 넘지 않을 것이라고 집계했다. 직접고용 노동자들과만 해당하면 4만 6천여 명 수준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는 1백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단 5퍼센트도 안

되는 수치다. 이를 두고 “완전 정규직화”라고 호들갑을 떠는 것은 낯뜨거운 일이다.

악몽

셋째,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내세운 “공정 임금”, “차별 시정” 대책도 매우 보잘것없다.

박근혜는 이미 대선 후보 시절에,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퍼센트로 인상하라’는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영세기업들이 문을 닫는 등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난하기 바빴다. 말바닥 노동자들의 생활고 따위는 안중에 없는 경총의 최저임금 인상 반대 논리를 되풀이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가 이번 국정 과제에서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 기준 마

련’에 기대를 걸기는 어렵다.

새누리당은 ‘상여금·성과금의 차별 금지’를 담은 기간제법·파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이미 임금 차별을 금지한 현행법도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고용불안 때문에 사측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차별 시정 요구조차 제기하기 어려운 처지다.

그래서 급속노조는 “비정규직 고용불안을 해소할 방안이 없는 한, 법안의 실효성은 제로에 가까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즉, 비정규직의 사용사유 제한, 간접고용 금지, 파견법 철폐 등 일방적이 빠져 있는 “차별 시정”은 실질적 개선을 담보할 수 없다.

박근혜가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제시한 산재·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의 공약도 실효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현행법 상으로도 보험모집인이나 캐디 등 일부 업

종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가입률이 10퍼센트에도 못 미친다. 보험료 전액을 노동자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인 법적 노동자 지위 인정과 노동기본권 보장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물론 이런 모순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노동자들은 박근혜의 ‘선심성’ 공약들을 이용해 운동을 벌이고 있다. 예컨대,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박근혜는 정규직 전환 약속 이행하라” 하고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

온갖 차별과 멸시, 고용 불안에 허덕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광범한 사회적 공감대를 불러일으킨 지 오래다. 이미 한국 노동자의 절반 가까이가 비정규직인데다, 최소한의 안전망도 없이 경제 위기의 한파를 견디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 이 때문에 박근혜는 말로나마 생색내듯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내세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최근 법원이 “자동차 생산공장에서는 합법 도급이 불가능하다”며 한국GM(구 GM대우)의 불법파견을 유죄로 인정하고, 고용노동부가 신세계 이마트 노동자 1천9백78명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 게다가 지배자들 내에서도 비정규직 관련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노동운동은 이런 모순을 잘 파고들며, 기회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서도, 그 모순을 폭로하면서 동시에 이를 이용해 운동을 건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곳곳에서 벌어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사내하도급법 도입 시도 등 공격에도 맞서야 한다.

박설

▶ 관련 기사 14면

박근혜의 노동 정책

기업 횡포에는 ‘자율’, 노동자 저항에는 ‘엄단’

박근혜는 역대 가장 많은 노동자의 죽음과 고공 농성 속에서 취임했다. 대선 직후 노동자 7명이 목숨을 끊고, 곳곳에서 고공 농성이 이어졌지만, 박근혜는 묵묵부답이었다.

대선 기간 쌍용차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이 해고된 데 이어 ‘전교조 불법화’ 엄포도 시작됐다.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 유가족과 노동자들이 그토록 처절하게 피눈물로 호소하는데도 1백58억 원에 이르는 노조 탄압용 손해배상 문제는 끝까지 철회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문제가 빠진 모호한 합의문을 받고 노동자들은 눈물을 삼키며 열사를 땅에 묻어야 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은 이처럼 반노동자적이다. 박근혜가 노동자들의 요구에는 관심도 없다는 의미에서 ‘무(無)노동’이라는 말도 나온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정책 기조는 “노사 자율 실천”과 “불법 행위 근절, 법에 따른 엄정 조치” 등에서 잘 드러난다.

“노사 자율”은 노동자들의 고통과 절규를 외면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새누리당 이한구는 쌍용차 국정조사 약속을 뒤집을 때도 “노사 자율”을 말했다. 24명이 죽어가도 ‘개별 기업’의 문제에 정부가 끼

어들 수 없다는 것이다.

“엄정한 법 집행”은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정몽구나 불법사찰을 일삼는 이마트 기업주를 향한 것이 아니다. 고통과 불의를 참지 못한 노동자들이 철갑에 오르고, 천막을 치고, 투쟁에 나서는 것을 ‘불법’으로 몰아서 공격하겠다는 것이다.

고용 유연화

한편, 박근혜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고용률 70퍼센트 달성’을 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 정년연장, 비정규직 차별 해소,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업주들의 탐욕을 제어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서가 아니라,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늘린다는 기조다. 따라서 이런 선심성 공약은 모순이게도 노동 유연화 추진과 연결돼 있다.

노동시간 단축은 2020년이 돼서야 OECD 평균 수준으로 만든다는 안일뿐 아니라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등을 도입해 유연성·불안정성을 높일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년연장 역시 임금피크제와 연동하고 있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정리해고 요건 강화’도 재

벌·기업주들의 압박 때문에 실질적 규제와 강제 방안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쌍용차 정리해고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요컨대, 박근혜의 일자리 대책은 노동 유연화와 임금·노동조건 등에 대한 공격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정부·보수언론 등이 네덜란드 모델을 제시하며 “사회적 대화협”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고통전가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기되고 있다.

경총도 “노사 대화협으로 일자리 늘리자”며 2009년 노·사·민·정 대화협을 되풀이하자고 말한다. 2009년 경제 위기 속에서 기업주들이 ‘고용 유지’를 약속하는 대신, 한국노총은 ‘임금 동결·반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저축계좌제

일이 많을 때 초과근로를 하고, 일이 없을 때는 적게 일하는 제도, 사용자는 필요할 때 마음대로 노동자를 부릴 수 있지만 노동자는 생활리듬이 깨지고 노동강도가 강해지거나, 실질임금이 감소한다.

임금피크제

기업이 노동자에게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해 준다는 핑계로, 정년 전 일정 기간의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

납·절감’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그해 쌍용차에서는 대량해고가 벌어져 노동자 2천6백46명이 해고됐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계속 줄었고, 비정규직·영세 작업장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 결국 박근혜가 말

하는 “사회적 대화협”은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려는 것이다.

1퍼센트 지배계급과 우파 기반 위에 서 있는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에 노동자들의 몫은 보이지 않는다.

성지현

막시즘2013

7월 19일(금) - 22일(월) | 장소 : 서울

주최 : 노동자연대다함께 문의 : 02-2271-2395

※ 막시즘은 13번째 열리는 국내 최대 진보 포럼입니다.

해외 연사 존 몰리뉴

존 몰리뉴는 영국과 아일랜드 사회주의노동자당 활동가이자 아일랜드 사회주의 사상 잡지 《아이리쉬 막시스트 리뷰》의 편집자다. 또, 아일랜드 좌파 정당과 세력들의 선거연합체인 ‘통합좌파동맹’에서 활동했다. 《조선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무엇인가?》(책갈피), 《사회주의란 무엇인가?》(책갈피), 《마르크스주의와 정당》(책갈피, 근간) 등을 썼다.